

기본소득

2023
가을+겨울
#017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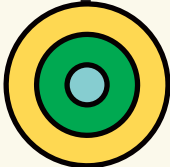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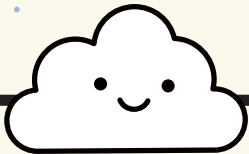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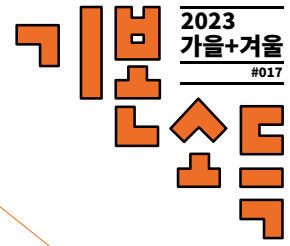
Income

Magazine

Issue No.17



CONTENTS



머리글	004	단념은 쉬운 일이다 _ 이관형
이 계절의 이슈:	007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여기 _ 최승호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리뷰	011	[전체 세션 1]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 내용 소개 _ 이건민
	017	[전체 세션 2]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 _ 서정희
	023	[전체세션 3]현실판 기본소득,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_ 한인정
	036	[전체세션 4]다중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본소득 _ 한인정
	043	[전체세션 5]민들레 홀씨처럼, 기본소득 _ 한인정
	051	[전체세션 6: 라운드테이블] 기본소득 실험: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최기훈
	058	[전체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 _ 이관형
논점	063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 검토 _ 윤여일
화제의 인물	069	[이주희]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_ 인터뷰어 이관형
문학	083	[짧은 소설] 지난여름 _ 은희경
	090	[짧은 소설] 빼 도둑 _ 전성태
	095	[시] 순대국 편지, 그래서 (외 1) _ 김용택
	097	[시] 시인과 은행 _ 나희덕
기본소득과 그 적들	098	‘당신들의 천국’과 윤석열 레짐 _ 류보선
특별기고	107	신승철과 기본소득 _ 홍승하
기본소득과 나	113	“이제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_ 목화균
기본소득의 새로운 자평	117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비교 연구 _ 이건민

단념은 쉬운 일이다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국제정세가 아주 유동적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에서 다시금 불이 붙는다. 여기에 대만 문제로 현상하는 미·중 대립도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제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니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기후 자체가 전쟁 이상의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라, 전쟁.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단념의 말이 절로 나온다. “의지로 낙관”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는다. 2차 대전이 결국 발발한 1939년 발간한 책에서 독일의 실존철학자 칼 뢰비트(Karl Löwith)는 이렇게 말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단념은 쉬운 일이다.”

이번 호가 많이 늦었다. 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한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 글을 쓰신 분들에게도 읽는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지난 2022년 겨울호에서부터 편집위원장 일을 해 왔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 가을에 가을호를 내고 그만두었을 텐데, 책을 더 내지도 못하면서 직책만 오래 끌어왔다. 아무튼 이번 가을·겨울 합본호를 끝으로, 전임 백승호 교수님에 비해 짧은 임기를 마친다.

열심히 해오신 선생님들께서 좀 지치신 듯하다. 좀 더 정력 넘치는 젊은 분들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Basic Income Issue



[기획자의 말]

이 번호 ‘이 계절의 이슈’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리뷰’이다.

지난 늦여름(2023.8.23.~26) 서울 한 곳(이화여자대학교 ECC)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고 지구 전체를 ‘모두를 위한 지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열띤 토론의 향연이 펼쳐졌다. 바로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열기가 대단했다. 늦여름의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뜨거웠다.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기본운동의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할 정도로 값진 성과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기본소득을 ‘모두를 위한 지구’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 믿는 전 세계의 기본소득론자들이 모여든 데다가 그들 각자의 손엔 각 나라에서 시도되고 실험된 기본소득에 관한 경험과 지혜가 들려 있었던 만큼 그 열기와 성과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번 대회가 뜨거웠던 것은 이번 대회의 토픽이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비상사태 이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이제 기본소득은 더 이상 몇몇 몽상가들의 유쾌한 상상이 아니라 전지구를 위기에서 구원할 잠재성 높은 제도로 각광 받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비상사태에 빠져들자 많은 나라가 그 처방책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기본소득을 시행한 상당수의 나라가 위기 국면을 넘어서면서 생긴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진정되면서 또 다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비상사태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기에 적당한 제도로 오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본소득의 전면적, 전지구적 시행을 위해서 또 다른 밀도 있는 숙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번 대회는 또 한 번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대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 제 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기본소득이 재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논의들이 다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미래의 기본소득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현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비유하자면 이번 대회가 기본소득 운동의 로도스다.

이번 호 기획은 기본소득의 역사에 있어서 변곡점에 해당할 이번 대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펼쳐졌는지를 소개하고 한편 그 논의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차원에서 꾸며졌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서정희, 이견민, 이관형, 최기훈, 한인정 씨가 맡아주었다. 고마움과 우정을 전한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여기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열리기 전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은 1년 전인 9월 8일 즈음이었다. 복기하면서 조직위 단독방을 둘러 보니 처음 계획이 오갈 때는 대주제, 소주제, 규모, 일정, 예산, 기조발제자, 자문단, 참여 단체 결정 등 막막한 느낌도 들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대체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판단해 본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니 주도하는 분들이 2016년 한국에서 개최 경험이 있어 서인지 안정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네트워크에 시민운동가, 정당, 시민단체, 청년 그룹, 연구자와 학자 그룹의 열정과 의욕들도 결합한 것일 것이다. 대회 장소는 초기에 국회의원회관으로 정해졌으나 그곳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화여대 ECC관으로 변경된 사연도 있었다. 변경 장소가 처음에는 생경했는데 하루 이를 지나다 보니 친근하게 와 닿았다. 시설 면에서 위치 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다고 평가해 본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주희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1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에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결속이 잘 되어 있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소득의 실현에 대한 의식적 참여자들의 지구적 운동 역사가 축적된 것일 것이다. 하이브리드 개최를 통해 멀리 외국에서 줌(ZOOM) 참여가 가능한 점도 신선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준비 과정에서 걱정도 있었지만 한번 실행해 보고 나니 지구 어느 곳에서도 연결하여 함께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인 것이다. 마지막 날 폐회식 직전 섹션에서 일본의 야마모리 도루 선생님의



온라인 접속 토론도 기억나고, 시간에 쫓겨 충분한 답변도 없이 끝난 장면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언제 다시 이런 의미 있는 대회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어 예산과 거리에 지장을 덜 받으며 대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대회 참여단체와 기관, 예산 확보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역시 한국적 역동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대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이 과정에서 조직위 분들의 고생이 많았던 점은 꼭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전남대회가 무산되고 그쪽 지역단체가 사전 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지만 시간, 예산, 공간, 참여 인원 등 전체 진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이었다.

첫째 날 애니 밀러 선생님의 기조 발제에서 기본소득이 정책목표가 아니며 수단이라는 것, 그리하여 공공서비스, 적극적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기금 형성에 의한 공유부(필자가 첨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멘트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현재 파일럿 실험보다 마이크로 데이터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수긍되는 지적이었다.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실질적 자유로써 기본소득의 실현이나 강남훈 조직위원장님의 탄소세 부과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가격의 간격을 균등화하자는 주장도 기억에 남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와 현실적 전개(부분기본소득)도 외국 참여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된 듯 많은 질문이 있었다. 서정희 선생님의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의 굴절과 위계'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완전 기본, 부분 기본, 범주형, 참여 소득, 부의 소득세를 두고 기본소득 5개 원칙에 따른 구분 등이 외국 학자에게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던져준 느낌이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성과와 현실 전개의 결과물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는 익숙한 것

이었지만 외국 학자들에게는 상당한 관심일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발견이었다.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그만큼 활성화된 결과일 것이다.

둘째, 셋째 날 코로나19 시기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도 커졌고, 기후재난위기에 기본소득의 도입 및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듯하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전환, 공유부, 기본소득과의 관계 맺기가 논의의 장이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특히 논의가 왕성한 공유부 배당론도 커먼스, 커머닝, 커먼웰스와 기본소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심화한 연구가 아직 남아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 등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와 논의, 디지털사회로의 전환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도 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빈곤, 불평등, 젠더, 건강 등과 기본소득 관련 주제들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문학과 기본소득 섹션에서 김혜자 시인의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라는 주제 발제에서 밭에서 고추를 따느라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줌을 통해 웅변가적 톤으로 열변을 토하는 시의 마지막 시구 “만국의 백수여 단결하라.”가 가슴을 울린다. 노동권, 사회권을 뛰어넘어 생명권으로써 기본소득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선한 마음의 인문적 지평으로 기본소득도 우리 사유의 깊이를 심화시키는 면이 있었다.

기본소득 옹호자들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휴머니스트들일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자본주의 맹아기의 격어가 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먹어도 좋다.”는 구직활동이나 직업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생계보장하여야 하는 복지국가의 사회권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빵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 국가론을 제창해 보고 싶다.

대회장의 분위기는 기본소득당원, 자원봉사자, 기본사회 단체 분들의 도우미 역할이 인상 깊었고 젊은 멤버들의 열기가 전체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는 느낌이었다. 개인적으로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4일 차는 하계 졸업식이라 이화여대 교정에 사각모를 쓴 졸업생들의 사진 찍는 모습이 환한 인상으로 와 닿기도 하였다. 나도 소싯적 저런 젊은 날이 있었노라 위안 삼으면서, 네트워킹의 저력이란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연대를 통해 세계적 행사까지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다.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반성과 기대를 해 본다. 한국에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참여소득, 공정소득이라는 용어로 작년 초 대선 기간에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분위기였으나 전략적인 프레임의 부재로 이내 사그라졌다. 난장판 인신공격 토론이 주를 이루다 보니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힘들었다. 현실 정치의 아젠더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 다르게는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받다 보니 기본소득 운동도 사회적 관심에서 확장기, 답보기, 휴지기를 반복하는 느낌이다. 현실 정치에 좌우되기보다는 우선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주제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현재 한국의 척박한 정치현실 속에서 꺼질 수 없는 작은 불꽃일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그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께서 대회 인사말에 적어 놓은 것처럼 발터 벤야민이 파울

클레의 ‘새로운 천사’를 보면서 느꼈던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은” 모습은 현재 한국 상황에서 똑같은 그림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다. 미래는 등을 돌리고 서서 방향을 잃은 불안한 날갯짓이고, 과거는 고물 창고 속으로, 현재는 피로, 권태, 분주함이지만 한국적 역동성이란 것과 폐허의 잔해 속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희망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어 본다.

이번 대회는 1986년 브뤼셀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대회 운동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이디어, 담론적 학술적 운동 차원이나 실험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정책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였다.

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2018년 핀란드의 제한적인 기본소득 실험, 2020년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미국의 2018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선별적 수당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 등 실험적 제도적 정치적 발전 등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위한 우울한 국면임을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이나 취지에서 변형된 왜곡된 모델 실험들도 나타났다. 이전보다 인식 면에서는 나아졌지만 광범위한 대중의 호응을 얻어야 하고, 과학적 실증적 연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 실험적 시도들도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성도 엿보였다. 그다음 정당 정책적인 당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을 종합해 보고, 기후변화 대응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도구로 보편적 기본소득 프레임과 전략 논의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가 커다란 과제이다.

4일간의 일정에 많은 주제가 발표되다 보니 소화해 내기 힘든 면도 있었다. 가이 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애니 밀러 같은 학자 그룹은 운동의 원조 멤버들이라 익히 알고 있는 터이지만, 개인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접할 좋은 기회였다. 각국의 기본소득 관련 사례와 이론적 논의도 다 쫓아가서 경청하기에는 많은 발제가 있어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많은 주제를 핸들링 한 백승호 선생님도 안식년 기간에 노고가 많았기에 감사할 뿐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보다 많은 인원이 정파를 떠나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현재 정치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 보니 언론 홍보에서도 대회를 소개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은 정말 아쉽다.

이제 중간 점검으로 현실 속의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왔는가? 엄중한 현실에서 걸림돌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며 중지를 모아야 하는지, 대회는 막을 내렸고 이제 다시 조용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척박한 현실을 헤쳐나갈 프로그램, 전략,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느낀 점이지만 전 지구적 연대 네트워크, 젊은 기본소득 지지자의 열기, 한국의 기본소득당과 기본사회 단체 등 든든한 추동 세력의 밑바탕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 전체세션 1 |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 내용 소개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전체세션 1의 제목은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이다. 위르겐 데 비스펠레레Jürgen De Wispelaere 초빙교수(프라이부르크대학교)가 “기본소득 실험들: (지속되는)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는 문제”를, 강남훈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이 “탄소 중립과 기본소득”을 발표하였다. 원래 루이즈 하그Louise Haagh 교수(요크대학교)도 이 세션에서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의 정의와 실현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녹화 영상 업로드가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발표는 전체세션 1이 아니라 전체세션 7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에서 발표되었다. 따라서 전체세션 1은 두 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좌장은 백승호 교수(가톨릭대학교)가 맡았다.

백승호 교수는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 교수가 말한 새로운 대안이 해방적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하면서 세션을 열었다. 새로운 대안이 해방적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란 바로 바람직성desirability, 실행가능성vi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 세션에서의 두 발표는 지속가능성 중에서도 특히나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것임을 환기하였다.

첫 번째로, 데 비스펠레레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이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행위자에 의해 추동되는 굉장히 정치적인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아래는 첫 번째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치가 작동하여 시작된 기본소득 실험은 막상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지지의 결여, 적극적인 정치적 간섭 등의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치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곧 기본소득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정치적 약속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발표자가 제기한 핵심적인 연구문제이다.

발표자는 실험이 계획대로 종료된 핀란드의 사례를 ‘선한 자^{The Good}’, 실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까딸루냐의 사례를 ‘악한 자^{The Bad}’, 실험이 영구적으로 취소된 온타리오의 사례를 ‘추한 자^{The Ugly}’, 실험의 규모가 축소된 아일랜드의 사례를 ‘교활한 자^{The Sneaky}’라 이름을 지었다. 핀란드 실험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애초의 계획대로 2년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한 자’라 명명된다. 까딸루냐 실험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점에서 ‘악한 자’로 불린다. 온타리오 실험은 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선거 기간에서의 명백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종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추한 자’로 일컫는다. 아일랜드 실험은 정부가 계획한 시범사업으로 ‘예술가 기본소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프로그램에서 합의가 된 게 아니었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할 정도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활한 자’라 이름 수 있다.

네 사례는 정치적 간섭이라는 공통 문제에 직면한다. 하지만 정치적 간섭을 간섭의 강도가 약한지 Weak(ish)/Strong(ish)와 간섭의 성격이 방해하는 것인지 뒤집는 것인지 “Blocking”/“Reversing”의 두 축으로 구분하였을 때, 네 사례는 정치적 간섭의 성격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졌다. 즉 핀란드는 “Weak(ish)”-“Blocking”, 까딸루냐는 “Weak(ish)”-“Reversing”, 아일랜드는 “Strong(ish)”-“Blocking”, 온타리오는 “Strong(ish)”-“Reversing”의 조합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기본소득 실험에서 정치적 간섭을 추동하는 것은 내적 동인과 외적 동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적 동인은 기존의 정치적 긴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고, 외적 동인은 정치적 행위자들이 선거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인 이벤트나 충격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과정은 자동으로 또는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적 맥락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뀌고, 정치적 행위자들 혹은 연합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행위자들과 그들의 동기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벤트들에 “정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장기적인 정치적 약속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자원이다. 정치적 약속은 약속할 의지와 능력을 요구하는데, 의지와 능력은 모두 취약한 특성들이다. 우리는 정치적 우선순위가 변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정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소득을 실험할 약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정치적 약속은 기본소득 실험을 정치 그 자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는 데에서,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정치적 해법들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해법들은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 신뢰와 도덕적/합리적 설득에 기대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순진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압력을 동원하는 것mobilizing public pressure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표명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하지 않는다. 협상bargaining은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변경할 사항이 많지 않으며 지지자조차도 정치적 평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등 더 광범위한 정치적 어젠다를 희생할 의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정치적 간섭에 대응하는 면에서, 정치적 해법들보다는 제도적 해법들이 더 나을 수 있다. 정치적 해법들은 반응적(사후적)이므로, 그보다는 예방적(사전적)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해법은 기본소득 실험을 정치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규칙, 규정, 과정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정치적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장벽들을 세우는 것, 계획, 실행, 평가 등 실험의 전 단계에 걸친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적 해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도적 약속은 초기 약속의 형태, 예산, 실험 행정, 외부 상호작용/협력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기본소득 실험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주요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기본소득 실험은 정치적 행위자들 및 과정들을 수반하는 정치적 이벤트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기본소득 실험은 사전적 영향과 사후적 통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불가피한 정치적 간섭에 취약하다. 셋째, 핵심 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장기적인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는 것이다. 넷째, 사후적으로 정치적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들은 잘 작동하지 않으며, 사전적인 제도적 해법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

두 번째로, 강남훈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데 너무나 뒤처져 있으며 지난 정

부와 현 정부의 정책이 크게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아래는 두 번째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미래세대는 엄청난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서 배제될 것이며, 우리 기업은 재생에너지의 부족으로 해외로 이전할 것이고, 우리 경제는 쇠퇴의 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정책을 가로막는 정신모델(mental model)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지구온난화는 원자력 혹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탄소세 증가는 나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라는 생각, 화석연료 보조금이 줄어든다면 내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고 나에게 손해일 것이라는 믿음, 토지는 공유부가 아니라 사유재산이라는 생각, 태양광 발전소가 내 땅 근처에 지어진다면 지가는 하락할 것이고 나에게 손해일 것이라는 믿음, 우리는 균형예산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생각, 정부부채는 개인의 부채와 같이 상환되어야만 한다는 믿음, 정부부채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생각 등이 탄소중립정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정신모델로 꼽힌다.

기후클럽은 기후정책에 협력하기로 동의하고 비회원국에는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채택하는 것이 기후클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클럽은 국제적 탄소가격 목표치를 설정하고 비회원국에는 탄소관세 혹은 모든 거래에 대한 단일한 보편적인 관세의 형태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된다. 2022년 12월에는 독일의 주장으로 G7은 기후클럽을 창설할 것을 동의하였다. 향후 세계무역체계는 기후클럽이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클럽을 이끄는 선진국들의 속도에 맞춰서 발전 부문 탈탄소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몇 년간의 제재만으로도 수출 주도 경제인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파괴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300조의 공공투자와 약 100조의 민간투자가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 만약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지대추구경제가 횡행하게 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형태의 에너지 전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에서 그것을 사는 형태의 기후채권을 대규모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토지 용도 지정 의무화가 필요하다. 하나의 제안은 지방정부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용도로 토지의 1%(100,000km²)와 바다의 1%(440,000km²)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론 지방정부 간 자발적인 토지거래는 허용한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2019년 1월 17일 《The Wall Street Journal》에 게재된 “경제학자들의 탄소배당에 관한 성명”에는 네 명의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15명의 전임 경제자문회의 의장, 두 명의 전임 재무부 장관, 27명의 노벨상 수상자, 총 3,554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서명하였다. 이 성명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탄소세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다. 탄소세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강력한 가격 신호를 보내는 정책이다. 탄소세는 배출감소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증가해야

하며, 재정중립적이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세 인상의 공정성과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로 마련된 모든 수입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일한 액수로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 가구들은 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탄소배당”으로 더 많이 받음으로써 재정적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다. 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정한 전환(fair transition)과 대다수 가구가 재정적으로 혜택을 입어야 한다는 정치적 실행가능성(political viability)을 담보하는 것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이다. 보편적 탄소배당의 필요성은 『성장의 한계』 50주년을 맞아 로마클럽이 발간한 최신 보고서인 『Earth for All: A Survival Guide for Humanity』(Sandrine Dixon-Declève, Owen Gaffney, Jayati Ghosh, Jørgen Randers, Johan Rockström, Per Espen Stoknes 저, New Society Publishers, 2022)에서도 강조되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세-탄소배당, 공유부 배당, 토지보유세-토지배당, 협동조합 배당, 이웃 배당 등 다섯 가지 배당이 필요하다. 탄소세-탄소배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며, 공정한 전환과 정치적 실행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유부 배당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투자를 통해 국민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토지가 모두에게 속한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공유부 아이디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다. 협동조합 배당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지분에 기반한 배당이다. 이웃 배당은 지역주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배당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의 거리에 의존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협동조합 배당과 이웃 배당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신모델을 커먼즈 정신모델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기의 탄소저장 능력은 생태계의 흡수 서비스(sink service)이자 우리의 공유부라는 생각, 태양과 바람은 우리의 공유부라는 생각, 토지는 우리의 공유부라는 생각, 화폐는 우리의 제도적 공유부라는 생각, 정부투자는 우리의 공유부를 창출하는 행위라는 생각, 협동조합을 창설하는 것은 지역 공유부를 창출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바로 대표적인 커먼즈 정신모델로 꼽힌다.

종합토론에서는 자연실험 형태의 실험이나 시범사업, 실제 정책과 실험 주체의 계획에 의한 기본소득 실험 간의 공통점과 차이, 다른 실험과는 구별되는 기본소득 실험만의 특이성, 현재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재생에너지 발전 추진 간의 충돌 가능성, 기본소득 진영에서 말하는 “모두의 것”에서 대개 비인간존재는 체계적으로 배제되곤 하는데 “모두의 것”에서 발견되는 인간중심성을 극복하면서 비인간존재를 포괄하기 위한 방안, 기본소득 실험 단계를 건너뛰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정책화된 예들이 다수 발견되는 한국의 사례에 대한 평가, 민간 재원의 기본소득 실험과 공공 재원의 기본소득 실험 간의 공통점과 차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기본소득 실험 사례 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청중 질문에 대해서 두 명의 발표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자연실험 형태의 실험은 전체 실험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정치적 과정의 작동 면

에서 크게 다르다. 다른 실험에 비해 기본소득 실험은 무조건성 등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본소득 실험의 맥락과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 실험마다 보호 기제도 제각기 다를 수 있으며, 실험에 따라서는 소규모에서 시작하여 대규모로 확장되는 것도 가능하다. 탄소중립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급증한다. 세금을 걷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기재부 관료들은 재정중립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지역주민에게도 “있는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설득시키면서, 최소한의 변화를 위해 함께 실천하자고 말해야 한다.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2100년까지 탄소중립을 못하면, 모든 생물의 50%가 멸종하리라 예상된다. 지구의 50%를 비인간존재를 위해 떼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 집권할 경우 취약성에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자원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도 정치를 결코 우회할 수는 없다. 핀란드 실험은 과학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나, 정치 프로젝트로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 중간에 끼어들기도 한다. 핀란드 실험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계획한 대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 약속을 지킨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는 비록 실험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치적 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 운동의 진전이 있었다.

끝으로 백승호 교수는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백승호 교수가 제시한 향후 연구과제, 곧 정책을 바라볼 때의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실험을 바라볼 때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하는 것, 데 비스펠레레 교수가 주목한 정치인의 비합리성과 강남훈 이사장이 주목한 일반 행위자의 제한된 합리성이 서로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기본소득 실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 태도, 생각 등이 실험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등은 ‘정치 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속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체세션 2 |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

서정희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체 세션 2가 2023년 8월 23일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반의 시간 동안 열렸다.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공유부 배당”을 주제로 한 2세션은 가이 스탠딩 교수의 “공유부 자본 기금 조성: 기본소득으로서의 공동 배당” 발표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서정희 이사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의 위계와 굴절” 발표로 구성되었다. 두 발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스케치해 보고자 한다.

1. 가이 스탠딩 교수의 “공유지 자본 기금 조성: 기본소득으로서의 공동 배당” Building a Commons Capital Fund: Common Dividends as Basic Income”

가이 스탠딩은 공유지에 대한 발표의 시작을 한국의 정신으로서 홍익인간과 향약을 소개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한국은 기원전 3333년 전 국가가 세워질 때,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시작되었다. 이를 “한국의 정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홍익인간의 정신은 공동체성, 개별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공유도시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향약 역시 한국의 정신이자, 마을 공동체의 연대의 정신이고, 이러한 한국의 정신들은 공유지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면서 공유지와 공유지 기금, 기본소득으로의 공동 배당 개념들을 설명해 나



갔다.

가이 스탠딩의 발표의 내용을 자세하게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발표문이 제출되지 않아서 기록의 의미로 거의 모든 내용을 남겨보고자 한다).

기본소득이 21세기 새로운 진보정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진보 정치가 사민당과 기민당의 경쟁이었다면, 21세기는 공유지의 정신에 기반해야 한다.

공유지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1982년 유엔 해양법이 체결되었다. 한국은 55만 7천 제곱 킬로미터의 바다를 공인받았는데, 이는 육지 면적의 4.7배에 이른다.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치경제학적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유엔 해양법에는 소위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는 인류 모두의 공통의 유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수역은 모두의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다국적 기업들은 이 수역을 약탈하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이를 돕고 있고, 이러한 행태들은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 공유자들은 전 세계 경제의 대단히 중요한 일부를 앞으로 잃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중요한 세계적 전환에 서 있다. 현재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서 지대추구형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단계이다. 사유재산 보유자들, 특히 금융재산, 지적 재산, 부동산 보유자들이 점점 더 많이 지대를 통해 재산을 증대시키고 있고, 노동소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유지의 약탈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 공유지, 사회 공유지, 지식 공유지 등이 약탈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대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어떠한 도덕적인 원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 이러한 분노가 진보 정치 운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지대추구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프레카리아트, 불안정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다.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불안함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로서 어떤 미지의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태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팬데믹일 수도 있고, 경제위기일 수도 있다.

20세기의 베버리지, 비스마르크로부터 발전시켜 온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기 어렵다. 20세기의 복지국가의 전제는 위험을 계산할 수 있고, 이러한 확률적 계산을 토대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확률 계산이 어렵다. 불확실성이 상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후적인 보상이 아니라 사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기본 소득의 정신이자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바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사회는 탄탄해질 수 있고 회복력을 가질 수 있다.

사민주의 정치의 누진세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조세 회피 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 재정 정책은 이제 생태적 재정 정책이어야 하고 동시에 공유지 정책이어야 한다.

공유지는 모두가 소유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유지는 공유자들 중 관리자들이 관리하고, 게이트키퍼들이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과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말하듯 재산을 분류할 필요 있다. 국가의 재산, 모두의 재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공유지는 별도의 재산 범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 혹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

나(가이 스탠딩)는 「공유지의 약탈」이라는 저서에서 7가지 공유지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① 공적 신뢰 원칙, ② 세대 간 형평의 원칙, ③ 관리자의 성실 유지 관리, ④ 사회적 기억의 원칙, ⑤ 사전 예방의 원칙, ⑥ 생존권의 원칙, ⑦ 속의 민주주의 원칙이다.

생태적 재정 개혁을 통해서 공유지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지대 추구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불확실성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법 중 하나는 공유 자본 기금이다. 이 기금의 원칙은 공유부를 가져가는 사람, 공유지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공유지를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지를 오염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응당 받아야 하는 몫인가? 공유지를 오염시켜서 누군가 빨리 죽게 된다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유지 자본 기금의 재원이다. 이 재원은 몇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세금이다. 소득세, 소비세, 자본세, 공적 서비스 이용료 등이 가능하다. 둘째는 부담금이다. 하나의 예는 탄소부담금인데, 이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현재 스웨덴 같은 경우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토지 가치에 대한 부담금이 있다. 그 외에도 20개 정도의 부담금의 종류가 가능하다. 광물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대한 광물 부담금, 중국이 한국의 어업권을 약탈을 한다고 하면 어업 부담금, 단골 비행기 승객들에게 부과하는 비행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다. 항만 부담금도 가능하다. 디젤 엔진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암을 유발해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토대로 공유지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긍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노르웨이해에서 석유를 추출해서 얻는 이익의 4%를 부과한다.

공유지 기금은 공유지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세대 간 형평의 원칙에서 시작한다. 자본 가치의 감소(오일, 가스, 광물, 채광)나 고갈의 경우 세대 간 평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고갈성 자원에 대한 수익은 그 수익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해야 한다. 재생가능한 자원의 경우 이후 세대가 이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림에서 이익을 창출한다면 산림 부담금을 걷고, 이 수익을 산림을 복원하는데 쓸 수 있다. 80%는 배당을 하고, 20%는 산림을 유지, 복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지 기금의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생태적 접근법이다. 이는 전략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현재 생태계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면, 이는 펀드의 재원이 되고, 동시에 그러한 행위를 못 하게 하는 전략이 된다. 공공부채, 분배의 위기,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자본이 공유지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 공유자들을 보상을 받아야 한다.

둘째, 종교적 정의 접근법이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공동 서신에서 “지구는 공유된 유산이다. 이 지구의 유산의 열매는 모두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언명하셨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구 유산의 열매는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유화이다. 공유화에 대해서는 『시간의 정치화』라는 책에서 다루었다. 공유기금, 공유 자본 기금은 모든 공유자들이 좀 더 나은 유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서정희 소장의 현실에서의 기본소득의 굴절과 위계

두 번째 발표는 필자의 발표였다. 이 발표는 출간된 논문을 바탕으로 한다. 논문의 서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논문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¹⁾

문제의식의 시작은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청년기본소득 등의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과 대안들이 누군가에게는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기본소득이 아닌 것으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단순히 완전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다고 전제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본소득의 변형인 것일까? 그리고 어떤 기본소득의 변형이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일까? 발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내놓은 것이었다.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모두 동일한 층위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들의 위계를 근거로

1) 서정희 · 안효상 (2021).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적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비판사회정책』, 제73호, 79-117.



기본소득인 것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기본소득 형태들의 제도적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핵심 요건으로서 6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각 요건들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하여 각 요건의 판별 기준과 유의미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의 공유부 배당 원칙과 기본소득의 목적이자 효과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근거로 기본소득 구성 요건을 위계화하였다. 셋째, 이러한 기본소득의 구성 요건의 위계를 근거로 기본소득 변형태로서의 여러 제도들의 위계를 도출하였다.

핵심적 내용은 기본소득의 5가지 정의 규정의 요소와 충분성을 더해 6가지 요건들을 구성하고, 각 요건들의 쟁점과 유의미성, 판별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6가지 요건들은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으로서 공유부 배당을 고려하면 무조건성과 보편성, 개별성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하고, 기본소득의 목적인 공화주의적 자유를 고려하면 무조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논증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구성하는 요건 6가지는 무조건성 > 보편성과 개별성 > 정기성과 현금성 > 충분성으로 위계화된다. 기본소득 요건이 4층으로 위계화된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제도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무조건성이 1단계, 보편성과 개별성이 2단계, 정기성과 현금성이 3단계, 충분성이 4단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요건의 위계화를 적용하면 기본소득의 현실적 변형 제도들을 위계화해서 그 상대적 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림 1> 기본소득의 위계

		기본소득				기본소득 아님
1단계	무조건성					
2단계	보편성, 개별성					
3단계	정기성, 현금성					
4단계	충분성					
최종 통과 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 탈락
제도 분류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3. 토론과 질의응답

가이 스탠딩과 필자의 발표에 대한 토론은 뜨거웠다. 특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 간 기본소득의 정의 규정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관심사가 반영되어 토론 시간의 큰 쟁점 중 하나는 자산조사가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정의처럼 보편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나 필자의 발표처럼 무조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에 관한 실무그룹의 작업은 1년 더 연장되었다. 더 많은 논의와 논쟁을 통해 기본소득에 관한 보다 정교한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 전체세션 3 |

현실판 기본소득, ‘지금도’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 도입의 정당성을 넘어, 어떤 모델을 도입할지에 대해 논하자
: 정치적 공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스토리텔링’에 있다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 연구소

‘문턱에 선 기본소득: 정책, 실험, 입법’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전체 세션 3은 가천대학교 유종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본소득 정책 및 실험, 입법을 앞서 만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들의 경험 속에는 이번 대회 주제인 ‘현실속의 기본소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때로는 희망적이고, 때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기본소득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세션 3에 대한 정리는 (발표를 진행한 순으로) 발표자의 약력 소개(각주참고)와 발표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미국의 보장소득 운동과 도시 정치: 민권운동과 반빈곤운동의 맥락에서’ by 마이클 터브스¹⁾

마이클 터브스는 7년 전 스톡턴의 시장이었을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이 이토록 발전되어 온 사실은 기본소득이 시민

1) 전 미국 스톡턴 마이클 터브스 시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캘리포니아 주 스톡턴 시의 79대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경제 보장 프로젝트Economic Security Project와 함께 최초의 보장소득 실험인 스톡턴 경제력 강화 실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약칭 SEED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보장소득을 지지하는 시장 모임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과 ‘캘리포니아 빈곤 종식 운동End Poverty in California’을 창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제가 7년 전 스톡턴 시장을 할 때, 기본소득 실험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각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이제는 125명의 시장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퍼졌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빈곤해결의 문제 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이야기를 꺼내며, 기본소득이 오랜 역사 속에서 시민권을 향상시키는 언어로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관료주의적이고 소수자에게 고통을 주는 복지시스템의 이야기를 기본소득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기본소득이야말로 ‘최저’, ‘기본’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기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초를 닦을 복지제도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기본소득 실험은 ‘할까, 말까’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존엄은 근로라는 단어와 붙어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존엄을 인류, 존재라는 단어와 연결해낼 것입니다.”

그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인종주의, 성차별, 이주민차별 등을 기본소득과 엮어내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드러내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과정에서 각종 편견이 사라지고, 똑같은 인간

으로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제야 소수자 시민권을 ‘근로’와 연결하지 않고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나와 달리 보이는 사람에게 돈을 줘도 될까’에 대한 의제가 존재합니다. 엄마, 흑인, 이주자 등에 관한 차별이지요. 그렇다면 소외된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그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구현해 낼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대중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는 펜데믹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험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며, 구조적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진전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할 일이 많지만, 추진하고 함께 투쟁해나가서 시민권을 쟁취해온 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기본 소득도 그러한 경로에 있겠지요. 모두가 기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2. ‘보장의 씨앗 뿌리기: 기본소득은 어떻게 미국에서 지역 파일럿과 프로그램을 통해 뿌리를 내렸는가’ by 스콧 샌턴스²⁾

스콧 샌턴스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다양한 보장소득 실험(100개 이상 진행중이며, 60개는 이미 종료된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냈다. 먼저 미국 보장소득실험에 참여한 이들은 무주택자, 임산부, 무급간병인, 위탁청소년, 범죄고위험군청소년, 전직수감자, 젊은 부모, 한부모, 고등학생, 성소수자, 예술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난민, 장애인, 기업가, 복지혜택 수급자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또한 지급 금액, 기간, 빈도도 다양했다. 가장 적은 금액의 보장소득은 주당 50달러에서 한 달에 1,204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급 기간 역시 3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했고, 주기 역시 주·격주·월·분기·반기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기본소득의 조건에 온전히 부합한 실험은 없었지만, 이처럼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장소득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어떤 형태의 UBI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가능해볼 수도 있지요.”

2) 스콧 샌턴스는 2013년부터 세계 전역을 순회하며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옹호해 온 활동가입니다. 그는 『돈이 있게 하라(Let there be money)』의 저자이며, 휴머니티 포워드(Humanity Forward) 재단의 선임자문관이자 ‘인류를 위한 제럴드 허프 기금(Gerald Huff Fund For Humanity)’의 이사이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일간 뉴스 허브인 《오늘의 기본소득(Basic Income Today)》의 편집인입니다.



그는 몇 가지 실험의 예를 들며, 보장소득의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 자선단체인 Miracle Messages는 노숙자 15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원했고, 그 결과 3분의 2가 주거지를 찾았다고 보고했다. 이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라 100명의 노숙자에게 1년간 월 75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된 상태다. 또한 미국은 2021년에 미국 내 아동 10명 중 9명에게 1인당 월 250~300달러를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 상태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아동빈곤이 감소했으며, 혈당을 팔거나 약물을 남용하는 부모도 줄었고, 불안 증상 역시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나아가 알래스카에서 40년 넘게 시행된 UBI 실험의 결과로서, UBI 1천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면 아동이 아동보호서비스에 의뢰될 가능성이 평균 2%~10%정도 감소하고, 투표율도 7.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실험을 운영하며 얻은 몇 가지 교훈을 공유했다.

첫째, “참여자 의견 경청하는 것”이다.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다양한 의견을 참여자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조군, 지지군을 만드는 작업”이다. 대조군으로부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역대학이나 지역 비영리단체를 활용해 참가자 모집이나 자금지원에도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실험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역시 지지군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UBI를 지지하는 시민활동에 가까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조언은 그가 여러 번 강조한 “스토리텔링”에 관한 것이다. 이는 그가 ‘기본소득 연구에 전념하게 된 계

기’와도 닿아있다.

“10년 전 우연히 Reddit(미국 초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 지에 보다가 UBI를 알게 됐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 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매달 기본소득을 받으며 살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UBI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죠(웃음).”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불안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같으며, 지금껏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불안감 뿐인 사회에서 어떻게 ‘안정감’을 상상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UBI 지지자들이 흔히 말하는 ‘안정감’을 상상가능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UBI는 데이터 싸움이 아니라, 스토리 싸움입니다. 매우 강력한 스토리 하나가,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중이 ‘기본소득이 존재한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술가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됩니다. 수천 명의 예술가들이 만들어낼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 미국에서 ‘Income to Support All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것 역시 UBI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의 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소규모일지라도 UBI를 통해 생활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들이 공유되며, 전국적인 운동에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그는 이러한 UBI의 스토리텔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2천 가구에 매달 식량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영화제에서 순회상영중인 “Raising the Floor”로 제작되었으며, 10가구가 성인 1인당 월 1천달러, 어린이 1인당 월 333달러의 기본소득으로 2년 반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Bootstraps”가 작업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한 도시에서 시작된 보장소득 시범사업이 2020년 6월 11개 주의 시장이 참여한 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에 6월 현재는 총 116개의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28개 카운티 공무원의 모임으로 번졌고, 이는 16개월 동안 전국 50개 도시를 순회하는 다큐멘터리 “It’s Basic”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UBI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도 역시 2019년에는 43%, 2020년에는 55%, 올해 초에는 61%로 나타났다. 게다가 2024년이면 샘 알트먼이 추진한 5년간의 기본소득 실험(두 개 주에서 1천명의 UBI 수혜자와 2천명의 대조군으로 구성)이 끝날 예정이기도 하다. 샘 알트먼은 실험이 끝나면 전국적인 UBI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장소득이 온전한 UBI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희망의 메시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 걸음씩 가다 보면, UBI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도전과 과제’ by 용혜인³⁾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제 21대 국회의원 용혜인은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 현 시점의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와 운동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소득 정치의 최선두에 서 있는 기본소득당의 수년간 고민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걸까. 그는 한국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 재분배 정치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나갔다. 먼저, 그는 몇 개의 지표(조세와 공적 이전 전후의 지니계수, 국민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의 괴리, 생산성 증가율)를 언급하며, 한국의 재분배 현실을 꼬집었다.

“한국은 재분배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부담 대비 수혜의 상대적 비중이 낮습니다. 생산성이 증가 속도에 비해, 복지 수혜가 지체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입니다.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인 그는 알바연대 창립 당시부터 활동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 행진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당신이 누구든 월 60만원”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했으며, 같은 해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현재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으며,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 ‘한국판 횡재세법’ 등을 발의했습니다.

지지출이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집권세력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기보다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재분배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 몇 가지 구조적 장벽(반공주의 유산, 역사적 저부담 체제, 부동산 불패 신화 등)을 제시하며, 재분배 정치의 허약한 기반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여러 정당들 역시 감세 혹은 증세의 기조를 놓고 논쟁하기보다 감세 기조라는 큰 틀에서 협력하며 감세의 크기와 대상을 놓고 대립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부동산 불패신화’와 동시에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 선거는 ‘지역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일쑤다. 그는 대다수의 개별의원과 정당이 감세 정치를 반복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증세 안건이 1~2건이라면, 대상과 폭이 미묘하게 다른 감세 안건은 정말 수백건이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이런 구조적 장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 연대할 세력은 있는가. 그는 기본소득 정치세력이 기성의 진보 진영과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물론 수십년째 저부담 체제가 중부담체제로 나가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전통적 복지국가운동진영이 재원 마련에 있어 기본소득과 전통적 복지를 제로섬 관계에 위치시킴으로서, 기본소득 운동에 암묵적 혹은 명시적 반대자 역할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가 휴가를 가면서 ‘기본소득 비판’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서 화제가 됐는데 요. 그 책을 쓰신 분은 민주당원으로 복지국가 운동을 열심히 해오신 교수님입니다. 이처럼 전통 복지국가론자들이 기본소득을 비현실적 요구라던가, 기존의 복지체제를 무너뜨리는 제안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노동운동계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산별체계가 아닌 기업체계의 노동조합 질서 속에서 한국의 조직 노동운동의 주력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 복지체제 하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대기업과의 분배투쟁, 임금인상, 고용보장이 절실한 투쟁의 요구로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윤 정부의 노동탄압이 높아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기존의 관성과 다른 강력한 재분배의 요구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로 지적됐다.

그가 마지막으로 주요하게 본 것은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형성’에 관련한 의제다. 그는 단순

여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조직화된 주체의 부재는 기본소득 정치 운동 확산에 뚜렷한 한계지점이라고 평가했다. 때문에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대한민국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을 기본소득 도입 운동의 주체이자 동료로서 조직해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의제영역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하는 이들을 조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를 딛고 나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다. 그는 기본소득 정치인으로서의 경험했던 고민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전개해나갔다.

“작년 대선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월 65만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지만,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서 탄소세와 토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연계 증세 입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비중있는 대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증세 재원 모델이 현실감 있는 논쟁으로 진입하기에 장벽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런 한계적 상황을 딛고 나갈 수 있도록 ‘조세형 기본소득 운동을 넘어,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단, 여기서 ‘넘어’라는 표현처럼 조세형 기본소득 도입을 포기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분배 정치의 영역으로 국한된 기본소득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주장이다. 재원 확충 방안으로 ‘공유지분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조세형 기본소득 모델보다 기본소득 운동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조세를 재원으로 할 경우 경제상황과 정치상황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시되는데,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기초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권리로서 인식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을 중요한 흐름으로 조직한다면, 조세형 기본소득 운동이 안고 있는 증세 정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주요 공유부 배당 정책 중 하나로 ‘신안군 사례’를 제시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발전, 해상풍력과 시민배당을 결합한 제도인 신안군의 사례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및 입법지원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혹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의 의의가 21세기 대안사회건설 운동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대한민국 전체를 공유 사회로 만들자는 정치적 제안과 홍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저는 기본소득 운동이 21세기의 대안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지분형,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야말로 시장만 남아버려 시민들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



의의 실패와 국가와 당만이 남아버려 대다수 구성원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딛고 나가는 대안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유지분형, 공동소유형 산업을 특징하는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성과 역시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나눠지는 과정이 시민들의 공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4. ‘카탈루냐 파일럿 프로젝트 설계: 오늘날의 맥락’ by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⁴⁾

티나우트는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시범 프로젝트 설명에 앞서 2001년 스페인 기본소득 네트워크 설립 시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2년 카탈루냐 공화국 의회에 보편적 기본소득 법안 제정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3년에는 카탈루냐 진보정당과 사회당이 카탈루냐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죠. 당시 합의안은 ‘시민을 위한 기본소득을 목표로 최저소득을 재정의하고, 다양한 제안을 연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혼란 끝에 2011년 스페인 전역에 다시 기본소득의 바람이 분 건 2014년께였다.

4) 스페인 카탈루냐 주정부 기본소득 프로젝트 담당자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공공정책 평가, 데이터의 처리 및 분석, 보고서 집필 등을 해왔습니다.

2014년 개인소득세개혁을 통한 스페인 보편적 기본소득 자원 조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16년에는 카탈루냐 파일럿 설계에 영향을 미친 BIEN의 성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시의 BIEN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이 안정적이고 다른 사회서비스와 결합하여 물질적 빈곤을 없애고, 각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기본소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취약한 저소득층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 또는 사회서비스를 대체하는 방식에 거부한 셈이죠.”

그리고 2019년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로 여러 단체, 조직 및 기관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공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의제는 대중화되고,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됐다. 그제서야 카탈루냐 의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 실시에 합의한 것이다.

“2021년 3월 보편적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사무국이 만들어졌고, 사무국장이 임명됐어요. 2달 정도 지나면서 팀이 구성됐고, 사무국은 시범 프로젝트 설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티나우트는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설계는 성인의 경우 800유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300유로를 지급(빈곤 위험 임계값), 지급은 개인별, 24개월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물론 수령자가 현금을 어디에 사용하건 그것에 제한이나 조건은 없다. 단, 연구팀은 UBI 도입을 위해선 누진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전체인구가 UBI를 받더라도, 사실 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이에 시범사업에는 세제개혁이 불가능하므로, 사무국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설정하여 인구 상위 10%는 시범사업 참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험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하게 되며 이 중 5천명이 실험군(UBI 수혜), 5천명이 대조군이 라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성과 보편성의 효과를 별도로 체크하기 위해 실험군은 두 집단으로 나뉜다. 먼저 무조건성을 입증하기 위한 집단은 카탈루냐 전역의 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되며 UBI를 지급한다. 또한 보편성을 입증하기 위한 집단은 방법론적 기준에 따라 몇 개 지자체가 선정되고, 이 중 두 개의 지자체 모든 주민(상위 10% 제외)에게 UBI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이중접근 방식을 통해 무조건적 실험을 통해 개인과 가구에서 어떤 수준의 일이 발생하는지. 즉 일, 교육, 가족, 소비, 투자 등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자체 실험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이용, 운영, 참여, 경제활동 등 총체적인 수준에서 보편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외적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해 실험진행은 연일 미뤄지고 있다. 2023년 3월 국회에서 승인되었어야 할 예산인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사회민주당(최근 중앙집권적이고, 진보적이지 않은 정책을 내세우는)이 내렸고, 의회 신자유주의, 우파 정당의 지지(현재 과반 수 이상의 표)를 받고 있다. 따라서 2023년까지는 시행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이어진 말에 따르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2023년 초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카탈루냐 국민 대다수가 UBI를 지지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의 좋은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시 예산과 사무국 운영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사무국은 다음 예산확보를 위한 작업을 이어나가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도 기본소득에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정치 엘리트들이 유권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 역시 가까운 미래에 의회의 역할관계가 바뀔 날을 기다리며 기본소득 실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5. ‘브라질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시로 향해 가는 발걸음’ by 에두아르드 수플리시⁵⁾

수플리시 의원은 삶의 긴 여정 속 기본소득의 역사를 온 몸으로 증언해냈다. 11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났다는 수플리시 의원은 늘 ‘개인적 발전 뿐 아니라, 집 밖 너머의 일’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집 밖 너머의 일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성경, 달라이라마, 이슬람, 토마스 모어, 토마스 페인, 앵겔스, 마르크스, 겔브레이스, 버틀러 러셀, 아마티아 센 등의 이야기를 연이어 회고했다.

“아마티아 센은 어린 시절 정원에서 놀고 있던 중 어떤 남자가 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등에 칼이 찔린 상태였지요. 아버지와 그를 병원에 데리고 가던 중 그는 아내에게 ‘인종투쟁이 일어나는 이 지역에 절대 오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자유가 있다면, 그는 자유로웠던걸까. 센은 고민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는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계기가 경제학과에 입학하고, 경제학과 교수로 살아가면서 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마이너스 소득세를 통해 최저소득 개념을 마주했고, 『문명화된 사회를 위한 경제학』(1988)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인의 삶을 살며 롤라

5) 에두아르드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는 노동자당 출신 전 상원의원이며,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브라질 시민기본소득 관련 법의 기초가 된 책 『The Bill of Law』가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동료 경제학자들과 마이너스 소득세를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브라질 사회는 부모들이 자녀를 먹여 살릴 돈이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자녀를 노동현장으로 보내는 일이 잦았죠.”

그는 각 가정에 최소소득을 보장해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지원을 주장했고, 몇몇 지자체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 관련된 최저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 가스비, 식료품 등의 지원제도와 결합하여 2003년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로 만들어졌고, 약 350만 가구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보우사 파밀리아)이 UBI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나아가 당시 수플리시 의원이 가장 성공적 사례로 상정했던 건 알래스카 배당이었다. 1년 이상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받고 있는 알래스카 배당으로 인해 알래스카는 미국 50개 주 중 가장 불평등한 주에서, 가장 평등한 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이 한 번 생기면, 알래스카의 정치 지도자 누구라도 이 제도를 건드릴 수 없을만큼 견재하다는 평가가 있어서다.

“저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경제학자, 철학자들과 브라질의 사례를 공유하며 보우사 파밀리아가 더 나은 UBI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상원의원으로서 2005년부

터 시작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시민기본소득제도를 신설하는 법을 제안했고, 2002년 상원의 이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2004년 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승인된 지, 횡수로만 19년째. 하지만 법을 실행하는 일은 말처럼, 혹은 상상처럼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법은 ‘법전’에 머물러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브라질에서 기본소득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회에서도 브라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천10만명의 브라질인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7%이며 식량 불안을 겪는 인구비율 역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2023년 유엔 보고서)합니다.”

그는 케냐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9년 케냐 비정부기구 Give Direct의 주도로 조직된 기본소득 실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24개의 시골 마을에서 진행되는 실험으로 인해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에 시민들이 가장 신경쓰는 건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UBI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그만의 생각도 아니다. 브라질 국민의 96%가 소득 이전에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사회 정책 재원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56%의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사회 영역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부유층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85%의 대규모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그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저는 2021년, 저의 80세 생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2년 룰라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새 정부(2023~2026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한국에도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곤 일어서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제목은 물론, “Blowing in the Wind”였다. (그는 많은 기본소득 대회에서 해당 곡을 여러 번 ‘열창’한 바 있다)

| 전체세션 4 |

다중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본소득

: 노동·돌봄·생태 위기 악화일로, 더 불평등해질 것으로 예상돼
: 전환의 단초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 갖춘 기본소득 꿈아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 연구소

“분배 정의, 젠더정의, 기후 정의... 우리는 이 모든 고민을 해야 하는 절멸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다중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바라봐야 하며, 기본소득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떨까요? 오늘 이 시간은 기본소득의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션 4. 사회자 이지은 발 언 중)

전체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은 생태, 노동, 돌봄 위기의 최전선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위기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는 영역에 서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는 점차 불확실/불안정성이 높아지며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발표를 듣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절멸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분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우산 아래 모인다.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로서 ‘기본소득’을 선택한 것이다.

1. 위기의 시대, 잘못된 대응, 가중될 위기

1) 인공지능과 노동의 위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천착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보다 훨씬 덜 주목받지만,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제조기술이나 신소재 생산이 아니라 ‘시간의 경제’와 닿아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그는 인공지능이 자본의 생산시간, 유통기간, 재투자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내며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보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생계노동으로부터 해방하고, 각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은 인간 활동에 대한 디지털 기록인 데이터를 천연자원처럼 채굴하고 처리하며,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플랫폼 기업, 즉 자본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인간 활동의 일환인 데이터노동이 ‘착취를 넘어, 전유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임금하락 현상이 가속화되며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사회정책과 돌봄 위기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인 젤레케Almaz Zelleke는 자본주의 이래로 가속화되는 돌봄의

1)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현재진행형’ 원초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기에 주목한다. 젤레케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한 성별 불평등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최소한 여성, 남성, 아동이 농업 및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함께 일했다”라며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경제활동이 도시와 공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었고 성별 분업으로 이어지고 공동책임이었던 돌봄을 위해 어머니(여성)이 혼자 집에 남겨졌다”라고 말했다.

젤레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간-역할의 분리는 근본적으로 생산이 재생산에 기대어 있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젤레케는 이를 자본주의가 돌봄의 에토스(비영리, 호혜, 관계)²⁾에 기대어 있음에도 이를 단절하고 오히려 자본주의 에토스(축적, 착취, 소외)³⁾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현 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위기는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그동안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유했던 돌봄을 더 이상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젤레케는 △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돌봄 제공자들을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돌려내는 현상 △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출생률 급락 등으로 돌봄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레케는 주로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돌봄의 위기가 곧 여성의 위기로 직결되며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의 만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정책이 이러한 돌봄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젤레케는 “사실상 생산이 무급 재생산 노동에 기반함

2) 비영리성Unprofitable, 호혜성Reciprocal, 관계성Relational

3) 축적Accumulative, 착취Exploitative, 소외Alienating

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현상이 사회정책에서도 드러난다.”라며 “사회정책이 무급 재생산 노동을 외면하고 유급노동-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급 재생산 노동자(대부분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취약해지며 비생산적·의존적인 존재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젤레케는 이어 EIEG 젠더 평등지수EIGE Gender Equality Index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유럽마저도 젠더불평등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선진국 역시 어머니를 포함한 대다수 여성이 유급고용에 종사하면서도, 무급돌봄에 대한 불균형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젤레케는 “고학력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유급고용·노동 시간이 짧고, 고용 지속성이 떨어지며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젤레케는 가구 단위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증거를 들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Social Assistance_EITC, TANF은 부부소득이 합산되면서, 저임금을 받는 이(대부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무급돌봄 노동과 근로소득이라는 이중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부모와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그는 부부공동과세 시스템하에 있는 맞벌이 부부 중 (주로 여성으로 간주하는) 보조소득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 조세체계는 부부공동과세 시스템으로 배우자 간 소득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여 주 소득자에게는 입장에서는 누진세가 낮아지지만, 보조소득자로서는 누진세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보조소득자의 유급노동을 최소화하고 주 소득자의 유급노동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불균등한 분업을 강화하며 나아가 연금까지 연계되어 성별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정책은 생계부양자, 비-고용된 돌봄 제공자로 나뉘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젤레케는 “성별 분업에 충실한 가구가 부부합산소득 제도를 활용하여 오히려 취약한 가정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이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은 공공돌봄서비스에 지출할 세수를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젤레케는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성 중립적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성별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강화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젤레케는 유럽연합 2023년 성 평등 보고서를 인용하며 회원국의 사회지출이 미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임금, 연금, 무급돌봄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젤레케는 경제참여지표가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 역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4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도 여성의 경제참여지표가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제참여지표가 성 불평등, 성별 분업을 해소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3) 무한한 욕구와 생태적 위기

포르투갈 민호대U Minho 윤리정치대학 연구원인 핀투Jorge Pinto는 ‘유한성과 미래Finitude and Future라는 발표를 통해 생태적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두로 인간과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유한하므로 취약하다. 하지만 지구 역시 행성의 한계로 유한하며 취약하다. 그러므로 핀투는 인간의 삶과 지구는 이러한 공통된 유한성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투가 주목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한성을 수용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투는 시민들의 행동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하나의 대응 양상은 ‘탈출’로 외부적 탈출과 내부적 탈출이다. 외부적 탈출은 부가 독점되고 집중되며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엘리트에 의한 지구 탈출’을 꿈꾸는 일이다. 이는 그가 언급한 영화 ‘엘리시움’처럼, 기후위기로 불타는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을 찾아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1%’의 특권층의 이야기다. 내부적 탈출은 ‘마음 챙김의 정치politics of mindfulness’로서 생태학적 위기를 마음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자의 마음가짐을 달리 하는 것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핀투는 이러한 정치가 개인에게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응 양상은 ‘도피’로 변명 혹은 비난을 하며 결국에는 상황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우선 ‘변명하며 도망치는’ 이들은 자신을 개인에 불과하다며 사회에 영향력 끼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각종 사회위기에 무관심하다. 또한 ‘비난하며 도망치는’ 이들은 생태학적 위기를 ‘위기’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지구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다중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본소득’

그렇다면 경제구조의 변화, 사회정책, 시민들의 행동 양상까지 모두 위기를 ‘더 큰 위기’로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발제자들은 서로 다른 위기에 주목하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 자본주의 내 존재하는 분배와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광범위한 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며, 완전 자동화 사회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 소장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공지능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은 인류의 공통된 지식에 의존하며, 그중 다수는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데이터에 의존하며, 알고리즘은 일상적 데이터 수집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자체가 일상적 데이터에 기대어 있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 일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젤레케는 기본소득이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비영리적 인간관계를 인정하고,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젤레케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가 지닌 불안정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를 ‘성평등한 사회’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보장정책과 달리 기본소득의 원칙 중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의 성평등적 분업을 촉진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특히 개별적인 기본소득이 모든 돌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젤레케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이를 성 중립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성평등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라며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논의가 그 토대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핀투는 UBI가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고, △ 진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은 부유층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덜 하며, 완전고용과 비교하면 일자리 공유가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핀투는 ‘가능한 탈성장 시나리오’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자급자족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 모델은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처럼 생계노동을 벗어난 개인들의 도전은 더 많은 사회혁신(자치, 협동, 사회보장과 관련된 역할 등)을 일으킬 것이며, 여유시간의 증가는 정치혁신(참여)으로 이어져 생태 친화적 사회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절멸의 시대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은 극렬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다. 포르투갈에서 정치 활동을 펼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핀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핀투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상상계가 필요하다. 인간에 의한 인간 혹은 인간에 의한 자연 등 지배를 위한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자”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활동이 유쾌한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다. 치밀한 분석과 확고한 대안과 미래상.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동료들. 아마 그 정도의 조합이라면, 위기를 넘길 가능성은 충분할 테다.

| 전체세션 5 |

민들레 흩씨처럼, 기본소득

: 국회·판동초·부산·농촌에서 펼쳐진 기본소득 이야기
: 기본소득 제 3의 도약필요, 각종 사회문제 열쇳말로 떠올라야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 연구소

전체세션 5는 한국의 기본소득을 한 자리에 모아냈다. 젤레케(뉴욕 대학교 상하이캠퍼스)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 세션에선 기본소득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효과,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 등을 논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본 세션에 대한 기록은 각 발표자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어린이 기본소득: 공유지의 활성화

군산대학교 이지수 교수는 판동초 ‘어린이 기본소득’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화로서의 기본소득’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유지에서 발생한 공유부 분배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본소득이 공유지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또 하나의 공유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온 셈이다. 이 교수는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지, 공유자, 공유부, 공유화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했다.

“공유지는 대지, 바람, 숲, 호수, 바다처럼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닌 모두의 것을 말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개인의 것이거나, 국가의 것으로 귀속되어 있지만요. 공유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공유부를 공유, 공동출자하고, 공유지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주장하며, 이



를 유지·보존하고자 하는 주체들을 말하지요. 공유부는 공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적·비물질적 사물thing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건 ‘공유화commoning’입니다. 공유화는 공유지에서 공유자들이 공유부를 (재)생산, 인식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 팀은 공유화를 중심에 두고 공유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린이 기본소득을 ‘공유화’라는 관점에서 살피기 위해서 공유화를 2단계로 나누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껏 다양한 공유지에서 나오는 공유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분배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공유지에는 숨은 몫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지만, 공유지를 토대로 얻을 수익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지 특유의, 공유지에 걸 맞는 분배방식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1차 공유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1차 공유화는 ‘공유자들이 공유지를 인식·이용·유지·관리·재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2차 공유화는 보다 ‘공유지 특유의 분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를 뜻합니다. 저희는 기본소득이 2차 공유화라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공유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제하고, 공유화 과정을 설명해 줄 사례인 ‘판동초’에 대해 설명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동초는 1965년에 개교했으며, 현재는 전교생 36명의 소규모 학

교다. 이 학교가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교 매점이 생긴 이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는 먼저 학교 매점 설립의 과정(1차 공유화)을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판동초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과 관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화려한 기억과 달리, 현재 판동초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떠나면서 문구점, 슈퍼 하나 없게 된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교육공동체는 학교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유지를 지키려는 공유자들이죠. 예를 들어 대안교육을 꿈꾸는 강환욱 선생님, 학교·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학부모, 작지만 강한 학교를 꿈꾸는 교장 선생님, 지속가능한 학교와 마을을 꿈꾸는 동문과 지역주민 등입니다. 이들은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매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매점은 학생들에게 ‘간식, 재미난 공간, 선택의 기회가 있는 공간’으로 자리했습니다.”

이 교수는 매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점에)못 오는 아이가 계속 못 오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제야 공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고 마침 ‘협동조합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기부금 1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눌 결심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매주 2천원이라는 어린이 기본소득이 시작된 것이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2차 공유화)이 공유지를 활성화시켰다고 봤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평등과 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자립할 수 있으며, 대등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유지인 매점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죠. 그 모습을 본 다른 공유자들도 이런 ‘공유지’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졌고요. 그렇게 기본소득을 계기로 후원자가 늘어납니다. 그야말로 공유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2. 부산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하고 싶은 노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반

군산대학교 서정희 교수는 부산에서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월 100만원, 7개월)에 대한 발표¹⁾를 진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 실험은 (기존의 기본소득 실험에 비해) ‘충분성’을 충족한 실험이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다수인 한국사회에서 100만원은 꽤나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한 참여자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들에게 100만원은 (최저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00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교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주제들을 도출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과 노동(근로유인)’의 관계에 천착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1) 부산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1기(2021년 6월~12월), 2기(2022년 9월~2023년3월)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은 이 중에서 인터뷰에 동의한 이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했다.

“근로유인은 기본소득을 뜨겁게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이 된다는 여러 실증적인 연구도 많죠. 하지만 저희 연구진이 주목한 건 기본소득이 주어져도 ‘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안 하는 지입니다. 이연구질문은 사람들이 노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복잡한 맥락이 작용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질적연구를 통해 기본소득과 노동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서 교수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노동을 유지하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과 연관성’, ‘근로조건이나 사업장에서 긍정적 관계’를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난 많은 청년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단순히 임금과 연계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자아실현에 가까웠습니다. 청년들은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할 때 ‘가슴이 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을 중지하는 이유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간극’,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1800만 경제활동인구 중 500만개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기준일 뿐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참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그 일을 줄이거나 그만뒀습니다.”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 이런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강조하며, 그 매커니즘을 3가지(투자, 터널링, 협상력)로 분류해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해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얻게 된 여유를 통해 인생의 다른 경로도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과 유사한 형태의 노동을 찾아 가는거죠.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격투기 선수를 꿈꾸는 청년이었는데요. 원래 맥도날드에서 일 했는데, 기본소득을 받으며 재활치료도 하고 PT샵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 보다 가까워진거죠.”

이처럼 서 교수는 기본소득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선 ‘노동의 시간’ 뿐 아니라, ‘노동의 내용’을 볼 것을 강조했다. 그제야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줄이냐, 늘리냐는 일차원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기본소득이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농어민기본소득이 꿈꾸는 세상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박웅두 공동운영위원장은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현실에서 농어민기본소득 사례,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갔다. 먼저 농어민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소득 재분배정책을 넘어서는 △ 사회생태공동체 전환의 기초 △ 새로운 사회를 향한 출발점 △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선언’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를 확대·반복해 온 우리 문명은 생태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경제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자본집약적 대농 위주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생태적 전환을 꿈꾸기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합니다. 누가 소득 불안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생태적 전환의 토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그 시발점에 있습니다. 가령,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7차 총회에서도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선 혁신적 먹거리 정책 수단에 우선 적용’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어민들의 다양한 실천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때가 참 좋지요.”



박 위원장은 현실 속 농어민 기본소득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첫째는, ‘마을공유지, 울력을 통한 공동생산, 자원공유, 대동회’ 등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사회공동체의 사례다. 둘째는, 공유부를 이용한 기본소득의 형태를 구현한 사례다. 공유부를 활용한 사례로는 △ 마을의 공유자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윤을 배분(보령시 장고도 어촌계, 태안군 만수동 어촌계) △ 마을을 기반한 공동사업의 수익을 배분(포천시 장독대 농촌체험마을, 정읍시 송죽(솔티) 마을기업) △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분참여를 통한 이익배당(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신안군 태양광·풍력)등이 있다.

세 번째로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형태로 지급한다. 이 중에서도 박 위원장은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가 직접 진행중인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기대를 드러냈다. 사회실험을 실시하고, 전국에 효과를 홍보해서 말그대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을 모아내겠다는 주장이다.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은 2023년 4월부터 36개월간 참여자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및 한 살림, 전국귀농운동본부, 지역운동본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등이 마음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농민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실질적 자유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국기본소득 운동의 정치적 도전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앞선 발표들이 제시한 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선 ‘기본소득 정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사회경제 문제 해결의 실용적 도구로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가령 기본소득 철학에 기반하여 다른 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셈이다.

오 대표는 ‘알파고-이세돌’의 격돌이 있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성격을 구분했다. 먼저 1기(2000년~2016년)는 기본소득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론적 축적, 운동 주체 형성시기를 뜻한다. 이 때는 진보적 연구자, 원외 진보정당 등이 중심이 되어 기본소득을 한국에 소개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받은 2기(2016년~현재)는 기본소득이 제도정치 내 중요 의제로 확산된 시기다. 이 때는 △ 주요 정당이 기본소득 의제를 수용하며 △ 국회에서 기본소득 법안들이 발의되고 △ 지역마다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복지체제는 선별복지로 복지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불만이 컸습니다.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이 뜨거웠고, 그런 과정에서 보편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된 것입니다. 물론 또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결합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움직임도 있었고,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은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경험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오 대표는 국민에게 친숙해진 기본소득이 대선의 주요 아젠다²⁾로 떠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전 정부 개혁 실패의 반작용으로 보수우파 정권이 당선된 상황. 오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 정치세력이 ‘기본소득 정치 3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당의 활동을 통해 그 사례를 구체화했다.

“기후위기, 부동산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로 혹은 각종 사회현안에 적극 연대하는 ‘기본소득’을 내세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기본소득이 텅 빈 기표가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쇳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연대 형성은 따라오는 거고요.”

2) 당시 여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라는 프레임을 통해 ‘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공약했으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월 65만원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하기도 했다.

| 전체세션 6: 라운드테이블 |

기본소득 실험

: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시간 | 8월 25일 금요일 16:30-18:00 (7:30-9:00 GMT)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극장 및 온라인

사회 | 호베르투 메릴(미뉴대학교)

패널 | 가이 스탠딩(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학교), 이수미(라베른대학교),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이건민(서울대학교)

작성 | 최기훈(경기연구원)

8월 25일 금요일, 이번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전체세션 중 여섯 번째로 꾸며진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본소득 실험들 : 실험의 목표, 맥락,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회에는 포르투갈 미뉴대학교의 호베르투 메릴 교수가 수고해주었으며, 토론패널로는 런던대학교의 가이 스탠딩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사라트 다발라 이사장, 라베른대학교의 이수미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건민 이사가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은 사회자 호베르투 메릴이 제시한 몇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으며, 각 패널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라운드테이블에서 던져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갈무리 한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UBI 실험에 대한 정당화와 그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각 참가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정당화가 가장 중요한지 고유의 시각을 통해 답변하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UBI 실험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험의 목적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추후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UBI 도입을 위한 단계임을 강조하며, 향후 논의에 더 많은 참고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질문 1: UBI 실험은 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 1) 과학적 주장을 통한 정당화: 경험적 증거에 기초
- 2) 여론 조사를 통한 정당화: 수집된 증거를 통한 규범의 생산
- 3) 증거에 기반한 정당화: 증거에 기반한 정책 구현
- 4) 지지를 통한 정당화: 언론의 호응과 UBI 논쟁 및 운동 촉발

네 가지 정당화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이 스탠딩: 정당화에 대한 중요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미: 실험의 규모와 지역적 편중으로 인한 소외 문제에 대한 제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라트 디발라: 실험의 목적은 주로 증거를 창출하기 위함이지만 정치적 목표나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건민: ‘지지를 통한 정당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험의 결과는 제한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두 번째 토론은 UBI 실험의 주요 목표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UBI 실험의 주요 목표는 빈곤 퇴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영향평가, 개인 자율성 촉진,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대한 촉진 등 사회자가 제시한 사례 이외에도 다양하다. 각 참가자는 이들 목표 중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토론에 따르면, UBI 실험을 행하는 주요 목표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은 실험의 효과적인 설계와 결과 해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토론자들은 실험이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확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미래의 정책 결정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질문 2 : UBI 실험의 주요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빈곤 퇴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개인의 자율성 촉진,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참여 촉진 등이 있겠다.



가이스탠딩

가이 스탠딩 : 기본소득 도입 방식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UBI의 일반적인 도입과 선별적인 도입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언급해야 한다.

이수미 : 실험이 완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찰, 자연실험, 그리고 증거가 모두 완성되어야 하며, 실험을 통해 현행 복지체제와의 차별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라트 다발라 : 실험의 목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과 동시에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건민 : 빈곤 및 불평등의 감소가 기본소득 실험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실험을 통해 예측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졌던, 또는 행해지고 있는 여러 UBI 실험 중에서 의미있다고 생

각되는 사례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미 있는 UBI 실험 사례에 대한 고찰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UBI 실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책 결정자들에게 실험의 중요성과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시나리오와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질문 3: 선행 실험이나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어떠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가이 스탠딩: 기존 실험 사례에서 기본소득 수급자들의 삶의 형태나 태도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은 실험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적 승수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해야 한다.



아슈미

이수미: 아프리카의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 사례를 통해 여자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개선된 것은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지급이 현재 소외된 여성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사라트 다발라: 지급 주기에 중점을 둔 실험 결과는 수급자의 시간 관리와 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기본소득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이 개인의 일상적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건민: 스톡턴 SEED 실험에서 기존 사회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보장소득(또는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증거와 잠재력이 발견되었다. 또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양적, 질적연구의 혼합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존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비판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본소득 실험에서 특히 노동과의 관계에 대해 그 결과가 실망스러운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네 명의 토론자들은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접근 방식과 노동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비판의 근거로 삼는 데에는 다양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실험의 기간, 목표, 실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실험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4: 기본소득 실험의 몇몇 사례들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그러한 결과를 반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이 노동에 대해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의견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

1. 가이 스탠딩: 실험의 결과와 상관 없이 실험이 행해지는 것 자체가 모두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또한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시범사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지급 시 근로가 증가한다는 결과는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샤란트 다발라

2. 이수미: 노동 시간의 증가가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증가 자체가 기본소득의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의 증가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실험의 짧은 수행기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 장기적인 실험과 그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3. 샤란트 다발라: 실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노동관계에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기본소득이 참가자들에게 본인 소유의 경작 시간을 늘리게 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이 노동과 관계된 긍정적인 변화이다.

4. 이견민: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데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 실험

의 경우 샘플 수가 적거나 실험 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를 해석하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으며 실험 결과에 대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토론을 통해 우리는 노동의 개념화, 자원의 재분배, 심리적 안정성, 그리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잠재력 중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긍정적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 결정에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5: 기본소득의 잠재적인 영향 중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측면은 무엇인가?



아hn빈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실험이 미래에 집중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일” 또는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개념화 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노동의 정의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수미: 가구 내 자원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가구 구성원 간의 자원의 공평한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이는 가족 내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일 것이다.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부재를 지적한다. 기본소득이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소득이 갖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건민: 기본소득의 건강효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소득이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건강 영향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더욱 강력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중요한 주제로, 각 토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언론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왜곡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대

응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토론자들은 이론과 배경의 명확한 전달, 실험에 대한 교육, 언론을 활용한 정보 전달, 그리고 오보 교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있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질문 6: 미디어가 주요한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응은?

가이 스탠딩: 가이 스탠딩은 언론이 이론이나 배경에 대해 부족한 조사를 통해 단편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적 관여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언론의 편향을 교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수미: 이수미는 언론이 제한적인 시야를 제공하고 실험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을 지적한다. 기본소득 운동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언론이 실험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라트 다발라: 언론이 기본소득에 대한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언론에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어도, 언론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건민: 이건민은 기본소득에 대한 오보가 대중의 이해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 언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오보를 교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전체세션 7 |

기본소득의 정의: 의미와 전망

이관형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전체세션7(이하 ‘세션7’)은 폐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전체세션이다. 기본소득의 ‘정의’에 대해 세 사람이 발표한다. 루이즈 하그Louise Haagh는 기본소득의 ‘정의正義; justice’에 대해, 애니 밀러Annie Miller와 야마모리 토루山森 亮, Toru Yamamori는 기본소득의 ‘정의定義; definition’에 대해 발표한다. 하그는 원래 전체세션1(정치속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속의 정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문 작성이 늦어지면서 마지막 세션으로 옮겨온다.

루이즈 하그의 발표제목은 “위기시대의 기본소득의 정의justice와 실현가능성”이다. 그는 기본소득이 정의로운 제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제한다.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는 해당 국가나 사회가 지닌, 발전적 거버넌스governance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정의로운 국가(사회)는 발전적 거버넌스 역량을 갖춘 국가(사회)이며, 그런 역량을 갖춘 국가(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도입)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즉, 정의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신자유주의가 외적으로 유입된 나라와 내부에서 태동한 나라 간에는 거버넌스 역량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역량이 높고 후자는 낮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한국과 노르딕 국가들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이다.

이 두 그룹(국가들)의 차이는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에서 드러



난다. 전자는 발 빠르고 적절한 대처로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였으나, 후자는 대처가 늦은데다가 적절성도 떨어져서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과 후유증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에 대한 후한 평가다. 평가를 간략히 살펴보자.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외부에서 받아들인다. IMF의 개입에도 불구하고(IMF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자유주의에 저항을 잘한다. 이후 오늘날까지 조세와 GDP가 동시에 성장한다. 특히 복지지출이 300% 이상 성장한다. 액수 자체는 적지만 이런 빠르고 높은 성장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그 원인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 획득한 높은 거버넌스 역량이다. 그 역량은 단적으로 팬데믹에서 드러난다. 락 다운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낮은 마이너스 성장(-6.8%, 영국은 -22.1%), 매우 빠른 고용회복(가장 빠른 2021년 3분기)을 기록한다. 고용보험 적용도 놀라운 수준이다.”

그의 말을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노르딕국가와 대등한 수준의 복지국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큰 떡을 들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건가? 암튼 우리나라에 대한 그의 평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외삽된, 하그의 발표가 끝나고, 본래의 세션7이 시작된다. 기본소득의 정의를 둘러싼 애니 밀러의 제안과 야마모리 토루의 연구가 발표된다. 좌장은 칼 와이드키스트(Karl Widerquist)가 맡는다.

BIEN의 창립멤버인,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의 애니 밀러는 “기본소득 정의(definition)의 개정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주장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내놓는다.

먼저 그는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BIEN대회(2016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다.

<표> 기본소득의 정의변화

2016년 이전의 정의	2016년 이후의 정의
[A basic income is] "an income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work requirement."

출처: 애니 밀러의 발표문

위 정의에서 정기성Periodic과 현금성Cash Payment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granted’가 ‘delivered’로 바뀐데 있으며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필자의 오해가 아니라면) ‘delivered’는 물건 배달하듯이 그저 ‘업무적/사무적으로’ 전달한다는 뜻인 반면 ‘granted’는 공동체 등에서 ‘공인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듯하다.

정의 이외에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다섯 가지 특성들characteristics과 관련해서는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의 기존 규정들에 내용을 첨부·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개별성: 개인단위로 지급되며 예컨대 가구단위로 지급되지 않는다.(Individual: it is paid on an individual basis –and **not**, for instance **to households**.)”에서 ‘not to households’는 ‘가구에 속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또한 ‘커플’은 ‘가구’와는 또 다른 공동수급단위a common benefit unit이므로 양자를 모두 배제하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의미가 담겨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별성: 커플 또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한다.(Individual: it is paid on an individual basis –and not, for instance, **on the basis of a couple or to households**.)”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보편성: 자산조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Universal : It is paid to all, without means test.)”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내놓는다. ‘보편성universal’을 ‘획일성uniform’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보편성은 자격규정이되 자산조사 없이 어린이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급대상임(Universal: **indicates who is eligible**. It is paid to all, **including children**, without means test.)을 나타내는 규정이라는 점 등이다. 그는 보편성이 사전적ex ante 특성이며 자격은 기존 범주나 여건circumstances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세 번째로 “무조건성: 노동요구나 노동의사업증요구 없이 지급한다.”와 관련하여 애니 밀러는 노동(work)이란 말의 모호성, 즉 남성중심적인 성격과 ‘임금노동work for pay’이란 말이 관용어로서 고착화되어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래서 이런 고정된 이미지와 남성 중심성,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무조건성의 본래적 의미인 ‘일체의 행동요건’ 없이 지급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즉 “무조건성: 임금노동을 하거나 임금노동을 할 의사를 입증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전통적인 성(젠더) 역할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등의 일체의 행동 요건들 없이 지급된다. 즉 의무부여가 일체 없다.(Unconditional: It is paid without **any behavioural requirements**, for instance, to work



for pay or to demonstrate willingness to work for pay, to undertake volunteer work or to behave according to traditional gender roles. In other words, it is obligation-free.)

아울러 새로운 규정으로서 균일성Uniform을 추가하자고 주장한다. “균일성: 기본소득의 금액은 특정시점이나 특정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평등하며, 기존의 범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Uniform: the amount of a basic income is the same/equal for everyone within a given jurisdiction at a given time and does not vary according to pre-existing categories or circumstances.)

즉 기본소득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바꾸지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행동 요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정기적이고 균일한 현금 급여이다.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uniform,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grant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 means test or requirement.”

야마모리 토루는 기본소득의 정의definition와 관련하여 ‘역사기록학’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그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예를 들면 “1페니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오랜 질문을 또 다시 제기한다.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대신 그는 기본소득의 정의의 역사를 ‘최소기준치역치閾値; Threshold’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간략히 살핀다. 그에 의하면 전자는 기본소득’ 후자는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s’이나 ‘부負의 인두세negative poll tax’, ‘무조건적 소득unconditional income’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현재의 정의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기준치’가 기본소득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와이더키스트는 2016년 BIEN대회에서, ‘grant’를 ‘deliver’로 바꾼 이유를 회고한다. 그에 의하면, ‘grant’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낮은 사람에게 ‘하사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는, 중립적 표현으로서 ‘deliver’를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그는 발표에 대해 (기본소득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의) 실제 정책적 도입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논쟁을 정의로 대체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는다.

세션 7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논의수준이 매우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기본소득 논의 안으로 들여오려는 노력은 알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현실화할 뻔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느끼는 온도차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전투를 직접 치러본 군대와 훈련만 많이 한 군대의 차이라고나 할까? 우리의 경험이 보다 원활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생각에 공감한, 어떤 센 언니 말씀하시길 ‘그 느무 영어가 ...’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 검토

윤여일 국립 경상대 사회학과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디자인하려는 이론적 도전들이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서 커먼즈 사고commons thinking는 현대 사회체계가 초래하는 불평등 심화, 복지 위기, 연대 약화, 생태계 파괴 등의 사회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서 요긴한 대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커먼즈는 사회과학의 한 가지 키워드로 등장한지 반세기가 지나 지속가능한 전환에서 핵심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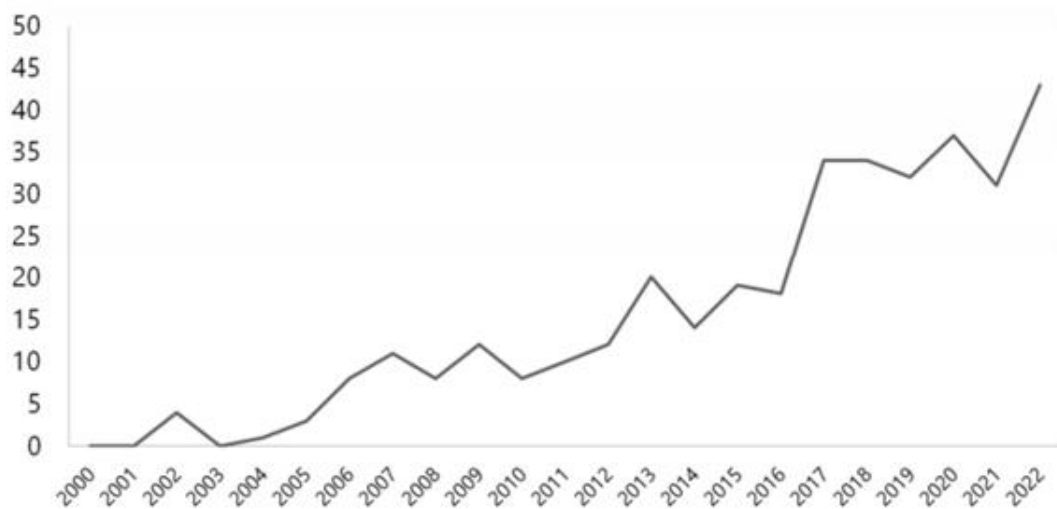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된 새로운 분야다.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의 지평은 자연 커먼즈의 영역을 넘어 인민의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과 관계의 영역(먹거리, 에너지, 돌봄, 주택, 교육, 공공공간, 보건의료, 지식정보, 미디어, 도시자치 그리고 기본소득)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까닭은 한국사회가 자연자원 고갈, 농어촌 붕괴, 도시인클로저,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 심화, 생물다양성 상실, 기후변화 등 심각한 사회생태적 문제 상황들에 직면하며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데, 커먼즈 패러다임이 이처럼 다양한 사회생태적 문제 상황들을 큰 그림 속에서 정렬하고 연결하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지난 성과가 무엇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먼저 한국학계에서 커먼즈 연구의 증가세를 살펴보자. <그림 1>은 KCI(Korea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에서 2000년 이후 ‘commons’를 영어키워드로 삼은 논문의 편수 추이를 보여준다(전체 359편).

2.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 경향의 특징

먼저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일본 커먼즈 연구와 비교해보자. 미즈마타 가쿠는 「일본 커먼즈론의 확장 과 과제」에서 일본 커먼즈론의 특징을 소개했는데, 그중 세 가

<그림 1> 2000년 이후 커먼즈 연구 논문의 추이(단위: 편수)



지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 커먼즈론은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둘째, 일본 커먼즈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는데, 엔트로피 경제학파가 그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후 산림, 어장 등에 관한 인류학계와 환경사회학계의 현장조사가 활발했다. 셋째, 일본 커먼즈론의 출현 배경에는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1960년대에 표면화된 환경오염 문제가 자리하며, 이로 인해 지역의 자연자원과 공동체의 관리방식에 관한 조사가 활발했다.

이러한 일본의 커먼즈론과 비교한다면 첫째,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2000년대에 시작된 후발 연구이다. 2000년 이전에는 커먼즈를 키워드로 삼은 논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2000년 이전에도 하딘의 ‘커먼즈의 비극’은 많은 논문에서 언급되었고, 공동관리자원(CPRs)을 포함한 재화 분류를 다룬 논문 역시 존재했다. 또한 1970~80년대부터 산림계 연구, 공동목장 연구, 공동어장 연구 등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의식적으로 커먼즈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는 아니었으며,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고 말았다.

둘째,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경제학이나 인류학보다 사회학, 행정학, 법학 연구자들이 주도했다. 전체 359편의 논문 중 인류학자의 연구는 19편, 경제학자의 연구는 14편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커먼즈 연구를 이끈 주요 분과학문이 다른 것은 해당 학문의 성격 차이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커먼즈 연구가 출현하고 성장한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리하여 셋째,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도시화와 공업화가 초래한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닌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전반적인 사회 위기에서 커먼즈 연구가 출현하고 성장했다. <그림 1>을 보면 커먼즈 논문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고, 2010년을 기점으로 편수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양상에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크게 작용한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한국의 커먼즈 패러다임은 1990년대 말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화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심화가 출현의 초기 조건이었다. 특히 급진주의 좌파 이론가들 중 일부는 커먼즈 패러다임에 내재한 반(反)자본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했으며, 반세계화 운동진영에서는 커먼즈를 21세기 대안적 사회운동의 통합기표로 바라보는 인식이

등장했다. 그리고 십 년 뒤인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가 닥쳤으며, 이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사회적으로 확산한 계기가 되었다. 이 국제적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동해온 이윤창출의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드러냈으며, 201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운동, 보편적 기본소득 요구 등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과 활동들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바로 이러한 동향이 커먼즈 패러다임의 부상과 서로 맞물렸다.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던 자원을 박탈당해 일상생활의 위기가 고조되자 잃어버린 커먼즈를 되찾거나 새로운 커먼즈를 만들어내려는 실천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신자유주의의 고조와 폐해를 사회적 배경으로 부상했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일본(그리고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지역)과 다른 경로로 전개되었다. 첫째, 토지 · 산림 · 하천 등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연 커먼즈 연구에서 시작되어 돌봄 · 교육 · 의료 등 사회 커먼즈 연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개화했다. 둘째, 농산어촌의 커먼즈 연구에서 시작되어 도시 커먼즈 연구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시에 그리고 별도로 전개되었다. 셋째, 커먼즈가 무엇이며, 커먼즈가 어떤 유형의 재화에 속하는지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실로 다양한 대상들(지표면 · 지하의 광물, 지상과 지하의 물, 유전자원, 목장, 어장뿐 아니라 도시, 주택, 먹거리, 지식, 문화, 기본소득 등)이 일거에 커먼즈로 해석되었다.

3. 한국학계의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 연구

이처럼 다양한 영역과 소재로 뻗어나간 한국의 커먼즈 연구를 이제부터 정리해보자. 그러려면 기준을 세워 다른 양상의 커먼즈 연구들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커먼즈를 분류하는 방식은 내력(전통적 커먼즈, 새로운 커먼즈), 개방성(폐쇄적 커먼즈, 개방적 커먼즈), 소재(로컬 커먼즈, 도시 커먼즈), 속성(자연 커먼즈, 사회 커먼즈) 등 실로 기준이 다양하다. 현실에 존재하는 커먼즈는 그 범주가 다양할 뿐 아니라 분류 기준에 따라 커먼즈에 관한 해석도 달라진다.

여기서는 크게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로 한국의 커먼즈 연구들을 분류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논자가 지적하듯 커먼즈는 공동의 자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집단(즉 커머너 commoner), 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규칙, 집합적 활동(즉 커머닝commoning) 등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는 해당 자원의 공급과 이용 방식, 필요와 충족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원리적 차이가 난다. 커뮤니티 커먼즈는 전체 동료 시민이 아닌 일부 사용자 집단의 결사를 전제하며, 해당 커뮤니티에서 관리되는 자원은 일차적으로 그 구성원의 활용에 귀속된다. 반면 퍼블릭 커먼즈는 원칙적으로 모든 동료 시민에게 필요에 따른 평등한 접근을 전제로 한다. 두 가지 종류의 커먼즈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 359편 중 305편에 이른다. 먼저 커뮤니티 커먼즈와 관련된 총 116편의 연구를 살펴보자.

자치적 관리 모델 연구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입각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커먼즈를 어떻게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마을은 어원적으로 물을 함께 사용하는 인구학적 집단과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 지금도 여전히 커먼즈로 유지되는 산림 목초지, 연안, 하천 등은 대부분 그것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공동체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마을의 자치적 관리 사례는 주로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조사했다.
커먼즈의 변동 연구
커먼즈를 하체의 위기로 내모는 동인으로 흔히 커먼즈의 인클로저가 거론된다. 거기에는 커먼즈의 자본주의적 사유화와 상품화,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과 임노동화에 따른 공동체 약화, 도시에서의 개발에 따른 공공 공간의 사유화와 축소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20세기 한국사회의 커먼즈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다차원의 역사사회적 변동의 계기들, 가령 20세기 초반 일제 식민주의 토지조사사업, 산림조사사업 등을 통한 근대적 소유권 도입,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1960~70년대 근대화의 다양한 압력들(상수도 도입, 농기계와 화학비료 도입) 등도 중시되었다.
커뮤니티의 이용 규칙 연구
커먼즈의 유형과 커뮤니티의 조건에 따라 이용규칙은 달라진다. 가령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개발위원회처럼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위로부터 조직된 마을 조직이 있다. 한편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처럼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커먼즈 조직이 있다. 마을 조직도 상위 행정기관의 조정을 받으면서도 마을의 운영을 위한 향약을 갖고 있으며, 커먼즈 조직도 자연자원 관리와 이용의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집행한다. 커먼즈와 관련된 사안에서 커먼즈 조직은 마을 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지만, 마을의 커먼즈를 차별할 때 두 조직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커먼즈 기반 공동체 발전 연구
마을에 관한 주류 연구는 자산 기반 공동체 발전(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에 근거한 마을만들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ABCD 전략은 지역사회의 재생과 개선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활용 가능한 지역의 자산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뜻한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는 점차 사회적 경제, 시민자산화 등의 논의와 결합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체토지신탁 등의 실천들로 사이를 넓혀가는 추세이다.
분쟁과 비합력 해결 방안 연구
1990년대로 접어들며 민주화의 확산, 지방자치제의 본격화, 시민들의 참여 의식향상 등을 배경으로 공유재의 배분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졌다. 2000년대에는 참여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정치, 자치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권력에 의한 전통적인 갈등 관리방안 대신 공유재를 사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는 이러한 연구에서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을 적용하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총유와 특수지역권 연구
자연자원을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의해 해당 자원이 장기지속적으로 보존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법학 영역에서도 자연자원의 공동소유나 집합적 이용관계를 법제도로써 뒷받침하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총유와 특수지역권은 토지를 소유하면 토지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근대의 사적 소유 관념과는 다른 방식의 토지와 커뮤니티의 관계가 오늘날에도 존재함을 보여준다. 총유와 특수지역권은 민법학자들이 전근대적 유제로서 평가하기도 하지만, 커먼즈를 위한 법제도는 측면에서 현대적 활용방법을 강구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퍼블릭 커먼즈와 관련된 총 107편의 연구를 살펴보자.

복지커먼즈 연구
200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중앙정부들이 수자원, 전력 같은 공공자원과 교육,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거기에 노동과 고용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복지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시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대안적 복지구상과 그에 관한 연구가 생겨났다. 그 목록은 돌봄, 먹거리, 에너지,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하다. 또한 2010년대에는 커먼즈론과 기본소득론이 접목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커먼즈 기반 기본소득론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창출하는 커먼즈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창한다.
도시의 반젠트리피케이션 운동 연구
농산어촌과는 다른 도시적 조건에 근거한 커먼즈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촌락과 비교하면 도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먼즈의 조건이 크게 다르다. 첫째, 토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원과 자산이 사적소유화되어 있다. 둘째, 산림과 야생처럼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자원이 별로 없다. 셋째,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 넷째, 공간의 규모가 넓고 경계가 개방적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도시에서 커뮤니티 커먼즈를 형성하기 어려운 이유이자 촌락과는 다른 유형의 커먼즈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에 대한 권리 연구
도시가 주민이라면 누구나 거리, 공원, 광장, 공터, 도서관 등 도시의 여러 공간과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때로는 그곳의 성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가 부상하고 있다.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노동, 이동, 주거, 교육, 놀이, 의료, 위생 등을 자본 축적을 위한 상품 생산과 소비영역으로부터 시민들의 자치영역으로 전환시켜내고자 하는 움직임과 그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커먼즈 연구
디지털 재화는 CPRs 상황을 벗어나 있다. 지식,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재화는 일반적으로 협력재/무형재의 성격을 띠는데, 이 중 협력재는 반(反)경합성과 포괄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반경합성이란 비경합성을 넘어 더 많이 사용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포괄성이란 타인이 재화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배제성을 넘어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해야 공동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학계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자식재를 디지털 커먼즈로서 접근하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의 정보커먼즈 도입 연구
정보커먼즈라는 개념을 가장 의식적으로 거론하는 분야는 문헌정보학에서의 도서관 개선 연구이다. 이는 현재 정보환경과 정보이용 행태의 변화를 반영한다. 첫째, E-book, E-Journal 그리고 각종 Web DB 등 전자 자원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가상공간을 통한 정보 및 서비스의 이용에 익숙한 세대가 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발달함에 따라 도서관의 정보 수집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한국의 여러 도서관도 새로운 공간 구성 개념인 정보커먼즈(Information Commons)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4. 한국 커먼즈 연구의 과제들

이상으로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로 나누어 커먼즈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점차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토지, 산림, 바다 같은 자연 커먼즈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특정 커뮤니티와 밀접히 관련되지만,

이념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두 속성이 중첩되는 커먼즈에서 이용자 커뮤니티와 일반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는 어렵고도 첨예한 논제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농산어업의 방식변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커먼즈로서의 필요를 상실하면서 해체의 위기에 놓이는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애초 하딘은 ‘과잉 이용’이 ‘커먼즈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과소 이용’으로 인한 ‘커먼즈의 해체’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커먼즈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방치되는 농토와 목초지를 로컬 커뮤니티가 외부의 자본에 매각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때 이제껏 그 커먼즈를 관리·이용해온 주민 공동체와 시민사회 사이에서 그 처분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는 일이 생겨난다. 주민 공동체는 해당 지역의 커먼즈의 처분은 자신들이 정할 일로 여긴다. 하지만 매각 혹은 개발 이익의 분배를 향해 움직이는 주민 공동체와 달리 시민사회는 자연생태를 보존하려는 입장에 서기도 한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경계의 문제다. 커뮤니티 커먼즈는 경계를 지닌다. 경계가 있어야 그 범위 안의 사용자들이 그 커먼즈를 책임감 있게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커먼즈의 처분에서 경계는 자율성의 전제인 동시에 배타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마을 커뮤니티가 더 이상 커먼즈를 보존하려 하지 않는 경우, 누가 어떠한 기준에서 커먼즈의 처분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둘째 탈커먼즈화의 문제다. 이 경우 두 집단, 즉 주민 공동체와 시민사회는 모두 농토, 목초지와 같은 자연자원을 전통적 커먼즈에서 이탈시키려 한다. 주민 공동체는 그 커먼즈에 대한 필요가 약해져 CPRs에서 사유재(Private Goods)로 재화의 속성을 바꿔 판매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며, 사회운동 진영은 공적 관리를 요구해 CPRs에서 공공재(Public Goods)로 전환해 보존하려 하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커먼즈의 변형이 초래된다.

아직까지 한국의 커먼즈 연구는 특정 범주의 자원체계를 다루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커뮤니티 커먼즈와 퍼블릭 커먼즈를 관통하는 설명 방식은 그다지 가다듬지 않았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관리해 오던 자연 커먼즈가 빠르게 상품화·사유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양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포착하는 시각의 마련은 한국학계 커먼즈 연구의 시급한 과제이다.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만나는 이주희 교수다. 그의 말은 약간의 속도감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에게 긴장과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는 사태의 심각함에서 어이없음을 발견하고 표현한다. 그러니 진지한 말을 해도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사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어이가 없으니 웃을 수밖에. 암튼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이 좋다. 유머 코드가 맞는 것 같다. 아니 ‘맞는다’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그건 아닐 것 같고, 뭐라고 해야 할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물리법칙을 신체로 느끼는 요즘이다.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인해 인터뷰 날짜를 좀 미뤘다. 장소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대안 사무실로 바꿨다. 흔쾌히 양해를 해주어서 감사한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다. 인세만 십 수억을 받았다고 하니, ‘낙양의 지가(紙價)를 올린다’는 고사(故事)가 과장만은 아닐 듯하다. 이어 그만큼은 아니지만 ‘공정하다는 착각(원제: 능력독재 the tyranny of merit)’도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능력독재’ 국가 중 하나인 걸로 미루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다.

이주희 교수는 최근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라는 책을 내놓는다. 능력독재, 혹은 능력주의의 전횡과 지배가 낳는 구조적 차별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차별이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감정을 낳는지에 관한 연구는 적다.

이 교수도 자신이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자이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조라는 큰 이야기가 차별 받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구체적 서사를 통해 어떻게 관철되는지는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BIEN 대회 장소가 이화여대였는데, 교수님께서 장소 선정, 대회지원 등과 관련해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기본소득을 주제로한 국제대회 개최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도 같은데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는 없었나요?

-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해외 학술대회 개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우리 대학 소속 발표자가 2명 이상이 돼야 대회 지원금이 나오는데, 저 말고 발표자 한 분을 더 발굴해야 했거든요. 그게 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되어 저도 좋았습니다.

최근에 책 내셨잖아요?

- 예,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 이요.

관련해서 새로 나온 그 책 앞부분에 본인의 과거사를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셨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성장과정이라까 포함해서 말씀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그 책에다 썼듯이, 부모 뺏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남녀평등이 적어도 의식차원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7, 8십년대 한국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녀차별을 겪으며 살진 않았습니다. 아니 잘 모르고 자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런 집안 분위기에 더해서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느낄 수 있었던 자유로움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예를 들어 가부장제가 주는 억압이라든가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대학의 교수 상당수가 여성이다 보니 저한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 목표는 교수 되는 게 아니었습

니다. 저는 원래,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탐정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초중고 내내 어마어마한 양의 추리소설을 읽고, 나는 탐정이 돼야겠다. 탐정이 될 수 없으면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터(investigative reporter)라도 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탐사기자?

-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딸을 너무 잘 아는 인물이어서, 식사 때마다 ‘너는 왜 남의 뒤나 쫓아다니는 기자가 되려고 하느냐? 교수가 되는 게 좋지 않냐’고 유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대학에서 여성 교수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것도 한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당시 전문직을 가지고 싶은 여성에게 선택지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꿈이 바뀌었던 거죠. 아무튼 제가 당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특별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자 형제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딸을 하나 낳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나 보더라고요. 차별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각별한 관심과 우대 속에 살았다고 할까요. 학교에서 여성학을 배울 때, 제 관점으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만 써 있어서 조금 지루했을 정도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학창시절 내내 차별을 겪거나 느끼시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차별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요?

-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유학 갔다 돌아오자마자 한국 사회의 현실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일자리 찾는 것부터.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회가 이런 걸 알았을 텐데 나를 그렇게 키웠단 말인가?’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귀국해서 초반에는 이런 사회에서 딸을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키우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아주 잠시 흘러가는 생각이었고,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 같은 것을 키워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할 걸 잃어버렸는데, 학교 때 혹시 학생운동 하셨나요?

- 글썄, 이것도 아버지 때문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딸

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예를 들어 저한테 강압적으로 ‘야, 데모 같은 거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이랬으면 제가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을 텐데. 정말로 틈만 나면 애원에 가까운 통사정을 하셨어요. 제발 데모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착한 딸이네요.

- 착한 딸은 아니었고요. 아버지도 피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렇지만 물론 학생운동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게으르고 사회의식이 부족해서 일 겁니다.

사회학과인데 사회의식이 부족하셨군요. (웃음)

- 네. 그랬습니다. 그에 더해 내가 데모할 자유를 위해 아버지의 사업할 자유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유지요. 보통 딸들은 어머니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똑 같이 아주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잘하셨네.

- 왜요?

저는 이대 82학번 여학생이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 애는 머리를 깎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집에서 못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은 학생 운동할 때 남학생들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학교 4학년때, 그때가 8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학생운동 접고 본업으로 돌아가던 때인데, 저는 오히려 그 때 혼자서 소위 ‘의식화’가 된 거예요

남들 그만둘 때.

- 남들 그만둘 때 필이 꽃혀 가지고.

오히려.

- 학생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미안하

기도 하고, 빛진 감정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지도교수도 진보적이라할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게 된거죠.

유학은 어떻게 결심하신 거예요?

- 유학은 그냥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무튼 대학교수가 되야 한다고 아버지가 맨날 얘기했으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에, 대학 이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어드미션을 받았고, 거기서 그냥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친척도 많았고요. 근데 나중에 이대 여성학과 교수가 되셨지만 당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강사를 하시던 조순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위스콘신에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가 있는데 거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저도 콜롬비아 교수진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가 그냥 위스콘신으로 가자, 그래서 에릭 라이트를 보고 그 학교로 갔고, 결국 그 분이 제 지도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실용적인 데에 관심이 있어서 노사관계를 거의 복수 전공을 했어요. 노사관계 공부할 때, 볼프강 슈트렉Wolfgang Streeck하고 조엘 로저스Joel Rogers라는 교수 두 분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 예를 들어 위스콘신 리저널 트레이닝 파트너십The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된 건데.

80년대 한국 사회 여공(女工) 현실 보면서 노동과 차별 연구로 방향 정해

WRTP요?

- 네. 당시 디트로이트에는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밀워키시의 공장에서 부품을 많이 제공해요.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흑인이거나 여성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할 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임금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했어요. 사용자는 노동자를 훈련시킬 동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훈련시키고 나서 다른 데로 가면 손실만 보니까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인 WRTP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단체, 밀워키시를 연결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그 두 교수들이 했어요. 제가 그들의 RA(연구조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What Do Unions Do?)로 유명한 하버드의 리처드 프리먼Richard B. Freeman이라는 경제학자가 PM이었던 독일의 노동자평의회works council를 미국에 수입하는 일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조교를 하던 경험에서 정말 많이 배웠구요. 물론 구조주의 계급 연구자였던 지도교수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아 유학할 때 학교를 바꾼 결정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이후 귀국하시고 노동 연구를 하셨는데, 이대 가시기 전에 노동연구원에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왜 노동 문제에 천착하시게 되셨을까요? 아까 WRTP 말씀도 하셨지만 그냥 가서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노동을 연구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 학생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질문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간단히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 사회학에서는 그것밖에 연구를 안 했다.” 고요.

그런가요?

-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독재 정권 내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부채의식이 해소가 안 된 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동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교 때부터 노동에 관심이 있었는데 미진하다는 감정이 남아 있어서 유학 가서도 노동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계급과 노동은 연계된 문제들이고, 다행히 노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훌륭한 교수진들이 있어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노동은 삶의 기본이잖아요? 대학교 때,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공장에 취업해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미국 갈 때도 그 책들을 들고 갔거든요. 특히 여성들, 여공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많이 읽어봤어요.

우리 사회가 요동치던 시절이었으니까. 유학을 가서서도 결국은 당시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노동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선택하시게 됐던 것 같네요. 여기서 책 얘기로 다시 돌아와보죠. 책 제목이 『차별하는 구조 차별받는 감정』이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차별을 연구한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덜 주고 얼마나 착취하는지에 대한 구조분석들이 주로인데, ‘감정’을 끌어들이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 일단 책 자체는 제가 기획해서 제안한 게 아니었어요. 글항아리 출판사 이은혜 편집장님이 어느 날 그냥 이메일을 주셨어요. 책을 내고 싶다, 저랑. 그리고 그 때 편집장님이 주신 제목이 ‘차별받는 마음’이었습니니다.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마음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쓸 수는 없어서 구조와 감정을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SSK(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연구 지원사업)할 때 양적분석도 하고 질적분석도 해서, 불안정 노동자 90명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FGI요?

- 아니요, 1:1 면접이었어요. 제 프로젝트 포닥 선생님들과 연구조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질문지 만드는 작업은 제가 직접 주도했구요. 근데 인터뷰 진행한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안정 노동자라서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들인데, ‘도대체 왜들 이렇게 착하세요?’라고.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관련 질문도 많이 했는데,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불안정 노동자면 분노를 해야 할 것 같잖아요? 월급도 적고 처우도 그렇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분노 대신 이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것일까?” 아님 이분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껴야 노조를 조직하든지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을 때는 고소도 하고, 뭐 이렇게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영세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업자를 되게 이해하고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려워신데도. 그때부터 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별 받는 사람들, 지배 헤게모니에 의해 체념-적응-혐오 감정 나타내

제가 지구의 회전운동(어지럼증) 때문에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목차하고 앞부분만 좀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남 탓을 하거나 구조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자기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프랑스어 어떤 분(스테판 에셀 Stephane Hessel)이 ‘분노하라’라는 책도 쓰시긴 했는데 분노를 안하고 체념,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까요?

- 네,

제가 보지 못해서, 읽어봐야겠네요.

- 예, 거기 4장까지 나아가시면 제가 ‘신념체계’라고 명명한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우리 사회에서 ‘빨갱이’라는 멸칭과 연결시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책에는 테오본 Göran Therborn, ‘테르보른’이라고 한국에 번역된, 그분의 이데올로기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여러 방식 중에 헤게모니 hegemony가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거의 같은 개념이죠. 비록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안에서 적응하고 살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에. 그 헤게모니라는 게 무서운 점은 말씀드렸듯이 강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의와 강제잖아요, 이데올로기.

- 그렇죠. 근데 동의가 부각되죠, 헤게모니 하에서는, 강제는 그걸 벗어났을 때 얘기고. 책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쓴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그때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는데 왜 이렇게 정규직 노조 반발이 많을까? 저도 당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의체에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언젠가 운전 중이었는데, 비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터뷰가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그 분이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목소리 톤, 그 태도, 그런 것을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톤은 이것(정규직 전환)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음,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뭔가 죄 지은 사람 같은 목소리인 거예요, 정규직화 시켜 달라는 게.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 그 부분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정'이라는 컨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차별을 시정하는 것도 공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별을 시정 안 하는 게 공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강압적으로 '야, 너네들 뭐, 어떻게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주냐? 안 돼' 하는 식으로 이뤄지

는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우리 사회 능력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험도 안 봤는데, 어떻게 정규직화를 해주느냐?'라고 하거든요. 차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시험도 안 본 내가 그런 걸(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건 공정한 게 아닐까야'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차별적 행위가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것으로 뒤바뀌는 그 과정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헤게모니에 조금 놀라고 당황하고 조금 좌절했다고도 할 수 있죠.

저도 학교에서 정의론을 가르키고 있는데, "프로 운동선수나 아이돌 돈 많이 주는 게 정당한 일이나?"고 물으면 백이면 백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당하냐니까 '노력해서'라는 거예요. 받는 액수가 일반 직장인 보다 수백배가 높는데, 그 사람들이 수 백 배 더 노력했나요? 물으면 저 사람 뉘 소리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능력주의에 대해 책에서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다루었어요. 테르보른의 이데올로기론에 따르면 예를 들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예고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치면 그거

는 자기의 계급 정체성과 관련된 이데올로기입니다. 타자 이데올로기는 다른 계급과의 관계 설정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인데, 예를 들어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예고 이데올로기라면 능력주의,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함, 창의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부르주아의 전유물이고, 타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테르보른은 이데올로기가 승인과 제재라는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와 실천에 영향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유치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여러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승인되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그 이데올로기에 철저하게 호명되게 되죠.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예컨대 지게꾼이나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열심히 해, 너 안 그러면 저렇게 살게 된다’라고 끊임없이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주입하고 결국 체화된다. 결국 공부 못한 건 내 탓이 되고. 이런 식이라는 말씀인가요?

- 그렇죠.

그것에 따른 차별은 정당한 거고, 내가 시험 공부도 못하고서 시험도 안 봤는데 인국공의 정규직을 노리는 거는, 이거는 거저 먹겠다는 심보다.

부분적 사실이 진실은 아니야, 그럼에도 진실로 호도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신비화

- 그렇죠, 그렇죠. 제가 책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호명이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는 신비화 mythification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게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게으러서 가난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한 두 사람 짝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신비화 과정이죠. 사회 구조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거나 경기가 나빠서,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가난해

지는데, 그런 건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척 중에 게으른 사람 하나 보기는 굉장히 쉽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게으르면 저렇게 가난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이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는데 진실은 아닌 거죠. 근데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비화 과정이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이놈의 새끼, 내가 그렇게 공부해라 그랬는데 편편히 놀더니,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라고 하지요. 그러고 나면 자식은 ‘이래서 부모가 나보고 공부 하라고 했구나’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가 내 새끼는 나처럼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돈 벌어서 사교육으로 애들을 내 몰고.

- 그래서 그런 사회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라도 그 물적인 강제(enforcement) 기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되풀이 될 때, 이게 공부하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에 변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조금 설명을.

-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바뀌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조선시대, 그 이데올로기가 안 바뀌었다면 지금도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걸까요? 지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옛날에 비하면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 그거는 바로 물적인 토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양반, 노비가 구분된 봉건사회에서 하인이거나 여성이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났고 여성이 일

을 하기 시작을 했죠. 돈을 벌었죠. 더 이상은 남성한테,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로 같이 살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돈을 벌어서 다른 길도 열리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조선시대에는 그게 너무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죠. 왜냐하면 그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으면, 즉, ‘결혼 같은 건 왜 해? 독립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여성이 있었다면 그냥 길에서 굶어 죽었을 거잖아요. 지금은 ‘결혼 같은 건 왜 해? 내가 벌어서 살아야지’ 해도 길에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저임금을 받지만 그래도 자기 삶을 살겠다고 하면 못 살 정도는 아니니까.

- 제재의 강도가 극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물적 토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 능력주의도,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될 때, 그런 인구가 늘어날 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축적될 때 그 말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데올로기적인 주입의 효과가.

열심히 해봐라 그러는데, 요즘 학생들 말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되는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건 맞죠,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물적 토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건 4차 산업혁명이고, AI고, 예를 들어서 예전 중, 저기술 노동자에게 그래도 있었던 일자리들이 빨리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아마 그때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다시 조명될 수 있겠죠.

능력주의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 변화하는 중, 기본소득 등 새로운 가능성 모색되어야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차별받는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차별받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바깥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 저의 책의 목적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능력주의에 영향 받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도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감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체념인데요, 헤게모니에 의해서, 차별의 원인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라는 거. 그 다음에는 ‘적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순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거는 여성 문제를 얘기할 때 한 건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조직 간 모방에 의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거나 승진을 안 시키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여성은 적응 기제를 발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기제 중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차별이나 불평등을 인지한다 해도, 그런 외부 환경적 맥락에 큰 문제의식 없이 맞추어 살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행위에는 관심을 잃게 되는 것, 그 대신 정치적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기만의 미시적인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혐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받는데 그 차별을 행하는 사람한테 돌리기에는.

너무 세.

- 나한테 올 위험이 너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그거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가지고 다툼이 있을 때 남성 청년 일부가 예전에는 내 경쟁자가 아니었던 여성 청년에게 적대감을 보인다는지, 혐오감을 보인다는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모두가 별로 바람직한 감정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차별하는 구조, 구조적 차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감정이 유도된 것에 불과하니 이런 감정을 유도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더 적절한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는 그에 분노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운 감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감정을 발산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혹시 미국은 어떻습니까?

- 미국, 어떤 거요?

아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기도 했고, 혹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 세 가지 감정이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인 현상 인지가 궁금해서 여쭙본 것입니다.

- 일단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과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성 문제에 있어서 그나라는 시장 원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 그게 완벽히 바람직한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은 별로 성차별 할 의욕이 없어요. 게다가 복지도 안 해 주니까 여성이 이민노동자를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일만 잘해주면 굳이 성차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임금 격차도 있고 유리천장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덜하죠. 혐오라는 차원에서도 거기선 주로 이민자 혐오, 유색인종 혐오가 주이고 이유는

우리랑 비슷하죠.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민자가 일자리가 겨간다고. 그런데 우리처럼 혐오가 광범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노인 혐오도 있고, 장애인 혐오도 있고, 비정규직 혐오도 있고, 빈자에 대한 혐오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가 혐오의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가 인종적 배타성이나 민족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더 정확하게는 능력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경멸과 편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뀐 거군요. 우리는 혐오가 자기를 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은 차별을 받으면 총 들고 나가서 갈기고, 우리는 자살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사회도 그렇지 않은가보죠? 요즘 보면 묻지마 칼부림도 많은데요, 혹시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 아마 책의 혐오 부분에서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묻지마 폭행, 총기 난사 같은 거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할 때 나타납니다. 서구 발전된 국가들이 복지를 제공하는 이유거든요. 우리도 좀 비슷해진 거죠. 그때 칼부림한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했던가요?

그렇습니다.

- 바로 그거죠. 부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가 더,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빈부 격차도 심해지고 우리도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칼부림을 무차별하게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미국화, 서구화하기보다는 미국화인데, 미국과 비슷해 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이 진단술과 치료법은 같이 가지만 양자의 발전은 그리 대칭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치료법도 많이 발전했지만 진단술은 훨씬 발전했다고 합니다. 비단 의학

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은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막상 치료법 이랄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아까 기본소득 얘기도 하셨고요. 이런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적극적 우대조치 등 우선 도입돼야

-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의 통과이죠. 아직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는 두 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 축은 경제계 및 일반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차별이냐는 것입니다. 경제계는 이와 같은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본인들이 운영하던 기존 방식, 편한 관행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하지말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 대졸이나 고졸이나 무조건 똑같은 임금을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합리적 이유 없이 너무 큰 격차가 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면 그 합리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종교계,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는 거죠. 성적 지향이나 그런 게 들어가니까요. 저는 이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힘들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경제계의 반대는 돈, 비용 이런 것의 문제인데, 종교계의 반대는 세계관이나 신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우트(Doubt)’라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여, 책에서 호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네요. 차별금지법 다음으로는 ‘적극적 조치’가 있죠.

어퍼머티브.

-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관련해도 굉장히 논쟁점이 많은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적극적 조치는, 차별금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남녀고용평등법 들어온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도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입돼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적극적 조치는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적극적 조치로 인해 사회 소수자 집단 중에서도 중간 이상에 있는 집단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죠.

-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계는 있지만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도입은 하지만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책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이라는 두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차별이 불평등보다는 더 적은 개념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의 경우, 차별로 인한 불평등도 있고, 차별이 아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격차로 인한 불평등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 모든 것이 심각하게 주관적 판단의 영향을 받는 회색 지대로, 모든 형태의 불평등이 어떤 면에서는 불공정함과 공정함이 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상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간접 차별은 중립적인 인사 관행이라도 특정 소수자 집단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 역시 차별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 하에서는 더욱 더 차별과 불평등이 회색 지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불평등이 너무 만연하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된 집단이 시정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가지지 못해서 차별도 또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 중에 기본소득을 제안을 했고, 그와 더불어 기본 서비스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복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본소득을 많이 비판하면서 스웨덴 같은 보편적 서비스, 복지 서비스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스웨덴



은 산업화 초기에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고, 그런 이유들로 사회보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거죠. 일자리도 제조업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가 바뀌었는데 또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하자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 지? 게다가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하려면 굉장히 잘 조직된 노동자 계급과 그와 연결된 진보정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스웨덴 모델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웨덴 모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그걸 ‘기본서비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기본 서비스는 당연히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같이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저기술, 저학력인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그냥 기본소득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스웨덴에서 성공적이었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평등도 함께 제고할 수 있으니까. 기

본 서비스의 양을 늘리면 기본소득의 액수가 좀 줄어더라도 괜찮잖아요. 의료, 교육, 공공주택 등에서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장에서보다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고 건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가 같이 발전하게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평등을 향한 노력을 해 갈수록 차별 시정을 할 수 있는 사회의 힘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양자 택일 문제 아냐

마치 기본소득이나 기본 서비스냐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구도 설정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서비스 필요에서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역량 문제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역량 문제가 기본소득만 갖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는 기본 서비스도 같이 병존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 네, 그리고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시정하는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하지만 저는 어떤 한 사회의 시민들이 공동된 경험을 하는 게 연대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료는 그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일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고급 서비스를 받고, 돈 없는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자유를 증진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되게 아름답게 조화로운 개념이고, 이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는지 정말, 아니, 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다 도입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예,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강화부터 해야 되는지 기본소득부터 도입해야 되는지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당신들은 말하느냐? 둘 다 필요하다? 그러면 좋지만 당장 제도를 갖춘다고 할 때 기본소득 도입 때문에 기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 논리에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기획하려는 그런 노력을 너무 배제하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서비스, 예를 들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고용이 되면 그 사람이 소득세tax를 냅니다, 세금을. 임금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로서는.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본소득만 받고 고용되지 못한 사람을 액티베이트activate 시켜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바로 그런 서비스 자체로부터 소득,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막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이 있는데, 어

떤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어떤 사람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든다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요?

- 네, 양자택일로 보는 분들은 사회정책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오히려 국가가 세수를 더 풍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회서비스부터 해야 한다거나 기본소득부터 해야 한다거나 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의 논리로는. 그래서 양자를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로만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기본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가족한테 보육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줘서 일할 수 없었던 여성이 일하게 된다면, 이것도 다시 국가에 세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원이 부족하니 사회서비스만 해야 한다거나, 사회서비스는 충분하니 기본소득만 더 줘야 한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인 것 같아요. 정 어려우면 양쪽을 똑같은 수준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수도 있고, 복지의 영역 별로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가 길항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보완관계에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양자를 자꾸 길항관계나 제로섬 게임으로만 보느냐,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물론 한 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어떤 것도. 근데 이것 가지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논쟁만 하고 있으면 생산적이지 못할 것 같네요.

사회학자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가 차별과 불평등이 지금 매우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를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지난번에 BIEN대회에서 요크대 루이스 하그Louise Haagh 교수께서 각국의 코로나 대응을 분석하면서 한국과 스웨덴은 모범국이고 영국은 최악의 국가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래서 원래 자기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BIEN대회 참석했던 여러 분들이, 교수들이 한국을 꽤 좋아하더라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 시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렇죠. 한국이 브라질하고 기본소득 월드컵에서 누가 먼저 이길 것이나?

한국이 액수는 적지만 한 300% 이상 복지 지출도 늘렸고, 이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없었던 사례라는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제가 이 책 가지고 강연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셔서 ‘제가 천공이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해 보자면, 저는 진보적 사회이론의 아름다운 점 중에 하나가 역사는 진보한다고 믿는 거거든요. 물론 후퇴할 때도 있고,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아주 지루하게 기다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진보하는 입장에서 그러므로 앞날은 당연히 다 좋아지겠다고 믿는 건데, 그렇게 긴 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인 나라가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게 된 데는 계기가 있거든요. 스웨덴이 후발 산업 국가였고, 영국은 길드 체계가 무너지고 장인이 없어지고 하는 데에 수백 년이 걸렸지만 스웨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중, 저기술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연대의식이 강한 산별노조를 만들고, 그 노조들이 지원하는 사회민주당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스웨덴은 그렇게 너무 잘 기능하는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거의 기본소득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들을 갖고 있고 사회 서비스도 앞서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좋은 복지국가제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회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빈곤도 발생하고 SI가 도입되고 일자리도 빠르게 분화되고,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저는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오히려 경로의존성이

적어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복지 형태를 더 빨리 도입할 수도 있겠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후발주자라서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 등에서 유리한 측면 있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은 아직도 현금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카드 쓰고,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중국은 아예 카드도 없이 핸드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다. 마치 이것처럼 복지 후발주자인 우리가 더 좋은 제도를 더 빨리 도입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또 더 기다려야 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그런 길로 가는 게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소한 차이 즉 기본소득이나, 사회 서비스나 이런 걸로 너무 시간 낭비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서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주다가 나중에 안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재부 비난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그 효능감을 사람들이 여러 번 느꼈으면 좋겠다고 계속 바랐거든요. 근데 그게 꺾였죠, 선거 결과도 그랬고. 근데 재난 지원금이나 부분 기본소득 같은 시도가 몇 번 더 일어난다면, 그런 효능감을 굉장히 많은 인구가 또 다양한 사회집단이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제도를 먼저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20세기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똑 같은 모델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나은 제도가 더 발견됐는데.

-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결합시키느냐? 재원이 아주 많으면 기본소득도 주고, 사회서비스도 하고, 다 좋다, 알겠는데, 물론 분



야마다 굉장히 정교한 기획과 선택이 필요하겠죠. 어떤 분야에는 기본소득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는 보육에는 기본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돈으로 주면 돈이 많은 집에서는 돈을 더 받고, 그나마 애기도 돈이 있어야 낳는데, 요새는. 이런 게 굉장히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중산층 수준에 맞춘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아동에게 부모의 낮은 소득이나 가족 간 문화자본 격차가 발생시키는 악영향을 줄여 보다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기본소득의 부정적 효과, 즉 여성들이 유급 노동보다 무급 가사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라는 그런 효과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성평등하게 바꾸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 (물론 이 성별임금격차도 꼭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무급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시간을 쓸수록 가구의 총 소득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보육이 커버해주는 시간이 늘어나 가구가 써야 하는 총 돌봄 시간이 줄어든다면 오히려 남성이 돌봄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두 차원의 복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충분히 의논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유명한 말(“이성으로 비판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을 인용해 놓으셨길래 제가 앞으로의 우리 상황에 대해 낙관하시는 지를 확인차원에서 여쭙 봤습니다. 지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계셨는데,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단가 아니면 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좀 해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가 네트워크에 참여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우리가 모두 길에 나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라, 아니면 나는 죽겠다’이렇게 운동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가능하면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 해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계간기본소득>이 어떻게 누구에게 배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회원만 보시는지 아니면 회원 아닌 사람한테도 보내주는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모아보아도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여름

은희경

소설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만나 한동안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며 일정한 규칙 안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 나에게 그것은 두 가지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 병원 입원과 패키지여행이다. 지난 여름 지구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달아올랐고 무기력과 짜증 섞인 권태 속에서 나는 그 두 가지를 치러냈다. 지금은 가을이다. 햇빛은 부드러우며 살갗에 닿는 공기는 서늘하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의 일을 겪기 전, 그러니까 지난봄의 시간들이 어쩐지 오래 전의 한 시절처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른 아침이면 혼자 동네의 공원을 걷는다. 아내는 나를 위해 두유 메이커에 콩과 견과류를 넣은 다음 스위치를 켜놓고 출근했을 것이다. 30년 넘게 함께 사는 동안 아내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식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부산하게 아침 시간을 보냈다. 얼마 전부터는 내가 아내보다 먼저 눈을 뜬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으면 잠에서 깬 아내가 내 쪽으로 돌아누우며 “잘 잤어?” 라고 말을 건넨다. 병원에서 나를 간병할 때 아침마다 소변통의 눈금 숫자를 기록하면서 건네던 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침 식사를 두유 한잔으로 대신하면서부터 아내는 더 이상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내게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아내는 꿈을 많이 꾸다.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특히 악몽을 꾸곤 하는데, 탈출하려고 숨겨둔 우주선의 위치를 잊어버려 고생했다거나 사투리를 쓰는 앵무새가 길을 틀리게 알려주어 헤맸다거나 하는 식으로 전개가 황당해서 듣고 있자면 웃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이따금 아내의 꿈에는 죽은 아내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막 잠에서 깨어서인지 내용도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내가 추계

연수회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너무 긴장했던지 갑자기 생리가 시작된 거야. 팬티가 젖어서 나 얼마 전에 산 베이지색 스커트 있잖아, 그걸 입었는데 피가 배어나 온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집으로 막 달려갔거든. 차길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 고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고, 그 와중에도 다리 사이로는 물컹한 게 빠져나가는 느낌인 데다 아랫도리가 온통 축축하고. 근데 그렇게 온힘을 다해 달려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집에 가 봤자 엄마가 없다는 걸. 엄마는 죽었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 그 말을 한 뒤 아 내는 잠시 침묵한다. 아침 산책을 준비하기 위해 침대에서 먼저 몸을 일으키며 나는 생각한다. 죽 음은 그런 것이겠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것.

그 꿈에서 아내의 어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꿈에서는 아내와 놀이공 원에 가거나 백화점에 간다. 꿈속에서 아내의 어머니는 늘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고 한다. 환갑이 가까운 아내가 젊은 여인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함께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하면 평평한 시간의 띠를 역방향으로 접어보는 느낌이 든다. 시간은 기억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꿈에 의해 재편집할 수 있다. 입원과 패키지여행이라는 두 개의 단체생활을 겪은 뒤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정을 공유해도 우리는 각기 살아온 그대로의 시간을 산다. 그리고 시 간은 철저하게 각자의 궤도로 흐른다.

먼저 입원 이야기를 해보겠다. 수술 날짜를 잡으며 담당의는 내 몸 속의 종양이 악성인지 아 닌지는 그것을 수술로 제거한 뒤 조직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나와 아내는 악성은 아 닌 거라고 생각했다. 종합검진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라는 수순을 밟았을 뿐 건강이 나빠지는 어 떤 조짐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 전날 입원해서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에도 나와 아내의 관심은 절제할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입원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지에 쏠려 있었다. 입원이 길어 지면 간병을 하는 아내의 연차도 길어져야 해서였다. 인턴이 와서 아랫배 왼쪽의 수술부위를 펜 으로 표시하고 관장을 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겁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

내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뒤 아내는 그 앞의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수술이 시작되 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은 오전 9시 20분이었다. 원내 휴게실에서 사온 달걀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으며 아내는 같은 의자에 앉은 채 나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수술이 종료되어 환자가 회복실에 있다는 문자는 오후 2시 30분에 왔다. 의사가 알려준 예상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나 있었다. 그것은 전날 밤 아내가 서명을 하려다 순간 멈췄던 수술동의서의 문구를 근거로 나쁜 상상을 떠올리는 한편, 그 상상이 결코 현실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삶의 관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 그럼에도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변화의 전조를 받아들이기 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호흡 보조기와 네블라이저와 산소포화도 체크 기계를 매단 채 병실로 돌아왔다. 지혈제와 거담제, 수혈 팩, 그리고 통증조절주사스티커가 붙은 주사액까지 4개의 링거를 달고 있었고, 허리 양쪽으로는 소변 주머니와 붉은 액체가 담긴 수술 오수 주머니를 찼다. 다리에는 혈액 순환을 위한 공기압 스타킹을 신고 복대도 차고 있었다. 그렇게 매달고 있는 갖가지 장치의 도움 없이 스스로는 아무런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채로, 의사가 몇 시간에 걸쳐 내장 깊숙이 내놓은 칼자국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단계가 바로 죽음이었다.

그러나 내 몸 또한 그만큼 필사적이었던지 4일째에는 금식 팻말을 떼고 미음을 먹기 시작했으며 침대에 매단 보조 끈을 붙잡고 혼자 일어나 앉을 수도 있게 되었다. 몸에 매달고 있던 것들도 하나씩 줄어들었다.

다음날은 오후 늦게 의사가 회진을 왔다. 조직검사 결과가 적힌 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거기에는 내 몸 속의 종양이 악성 신생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악성은 보험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를 원무과에 접수하라고 좋은 소식이라도 되는 듯이 덧붙였다.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바로 저녁 시간이 되어 식판을 건네받았지만 나는 입맛이 돌지 않았다. 아내가 병원 밖의 식당에 나가 내가 평소 좋아하는 추어탕을 사왔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이내 숟가락을 놓아버리는 내게 아내는 그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며 단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할 뿐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불현듯 몸이 나른하고 눈꺼풀이 무거워진 나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달라지는 건 조금밖에 없었다. 몇 가지의 아주 오래된 습관을 바꿔야 하겠지만 나는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 몇 가지가 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알아가게 될 테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나의 다음 단계의 삶이 될 것이다.

4인 병실에서 내 자리는 오른쪽 창가 쪽이었다. 연령대가 비슷한 환자들끼리 방을 배정하는 지 나머지 세 명의 환자들은 70대와 80대였고 60대 후반인 내가 가장 젊었다.

얇은 커튼 한 겹으로 가려진 옆 병상의 노인은 하루에 몇 차례씩 집중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건지 못할 뿐 다른 질병은 없는 그 노인은 종일 갑갑함을 못 견뎌했다. 누운 채로 흘러간 트로트를 목청껏 부르거나, 병실 문밖에 놓인 보조 기구를 붙잡고 킁킁대며 걸음을 내딛는 연습을 했다. 나머지 시간은 간병인과 큰 소리로 다투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재중동포 중에서도 역량이 드센데다가 생활력 강한 30대 여성의 활기에 더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인생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혼자 나가 돌아다니지 말아라, 말 좀 들어먹어라’가 간병인이 소리를 지르는 레퍼토리였다면 노인은 ‘네가 늘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너는 네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항변으로 고함을 치며 맞받았다.

그들이 연대하는 순간은 노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였다. 간병인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고자질을 하듯 노인을 간병하는 고충을 하나하나 토로한 다음 노인에게 핸드폰을 건네 주었는데 그때마다 노인 역시 트로트를 부르고 간병인과 싸울 때의 기세는 간 곳 없는 애잔한 태도로 자신이 병실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혼자서 걸을 수도 있으니 그만 내보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였다. 전화기의 볼륨이 한껏 키워져 있는 탓에 노인의 아내가 대꾸하는 말이 나에게까지 들렸다. “진말 말고 운동이나 잘 해. 간병인 말 잘 듣고.” 노인의 아내는 언제 면회 오냐는 노인의 물음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어진 뒤 노인의 입에서는 뒤집어진 권력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의 불만과 욕설이 새어나오곤 했다.

맞은편 병상의 80대 노인은 입원부터가 요란했다. 보호자인 50대의 아들에게 이곳이 환자들의 공간이란 것은 물론, 자신들이 그 중 4분의 1의 지분밖에 없다는 것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의 가족뿐이라는 듯한 태도였고 명품 셔츠와 단정적인 말투를 통해 자기가 속한 계급을 맘껏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목청을 높이는 내용은 두 가지였다. 입원을 거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 여러 경로를 거쳐 물색한 간병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 그는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뒤 인지능력이 손상된 것을 본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연신 질문을 던져댔고 거기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입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려 했지만 노인의 거부는 완강했다.

그들의 대화 아닌 대화는 이십분 넘게 이어졌고 가까스로 노인이 그날 하루만 병원에서 지내겠다는 데까지만 허락한 사이 약속된 간병인이 왔다. 역시 재중동포였지만 트로트 노인의 간병인과 달리 체격이 왜소한 60대 여성이었다. 그 간병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노인을 침대에 눕힐 수 있었고 노인이 기저귀 차기를 거부하자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데려갈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그 간병인은 곧바로 다음날 젊은 간병인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운동복 차림의 둘째아들이 새 간병인을 데려와서 또다시 퇴원을 주장하는 아버지를 30분 가까이 설득한 뒤 형에게 전화를 걸어 ‘형도 못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이겨’라고 소리친 뒤 돌아갔다. 두 아들은 다시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인은 고집을 행사할 기회가 더 이상 없었으므로 하루 하루 병실 생활에 적응해 갔다. 담당의사가 와서 단어를 따라 말해 보라거나 산수 문제를 낼 때면 ‘내가 그 시골 학교에서도 산수를 백점만 맞던 사람이야’라고 역정을 내는 게 고작이었다.

대각선 쪽 병상만이 조용했다. 언제나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환자가 전신을 움직이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남자 간병인이 있었다. 식사시간에도 환자에게 밥을 떠먹이며 간간이 말을 거는 남자 간병인의 목소리가 커튼을 통해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들이 퇴원하는 날에야 목까지 이불을 덮은 노인 환자의 모습과 남자 간병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잠시 입원했을 뿐 그 전에 있던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남자 간병인은 자신이 2년을 성심껏 간호해서 그나마 사람을 알아보고 소리로나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한 다음 그렇게 살려놓으니 죽고 싶다는 말만 한다고 불만스럽게 내뿔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는 공동생활에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다. 트로트 노인과 산수 백 점 노인 똑같이 내게는 짜증스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간호사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매일 나의 환자복과 침대시트를 갈아주고 소변량과 식사량과 음수량을 중간 합계까지 내가며 착실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그 병실에서 가장 젊은 환자이니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면도를 해주고 건식 삼푸까지 사오며 간병을 하는 아내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다. 깊은 밤과 새벽, 간호사가 체온과 혈압을 재러 오면 아내는 어김없이 간이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나의 체온을 묻곤 했다. 나는 자주 열이 올랐고 체온이 높으면 얼음찜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나는 오히려 밤에 잠을 이루기가 더 어려웠다. 통증 사이사이 불쑥 얼굴을 덮어 누르던 혼절한 듯한 잠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제나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는 병실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무렵 깨달았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트로트 노인이나 산수 백 점 노인이 아니라 그들과의 동행이란 것을.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투병과 쇠약한 스러짐의 여정이란 것을. 퇴원하던 날 아내는 노인 환자들과 간병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감사했습니다. 저희 먼저 나가요.” 이미 병실 밖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나는 아내가 팔을 잡아끌어서야 내가 도망치듯 걸음을 빨리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입원에 비하면 패키지여행은 일정도 짧고 또 수술처럼 심각한 사안이 동반되지 않는 여가 활동이어서 할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 수술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비행기를 타도 되는지 염려가 되긴 했다. 다행히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줄 뿐 여행을 만류하지는 않았다. 왜 이런 시기에 굳이 일본 여행을 가려고 하는지 묻는다면 아마 나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동창 다섯 명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해온 데다, 나를 빼고는 각기 현업에 있는 터라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미루고 미룬 끝에 가까스로 결정한 여행이었다. 내가 빠진다고 하면 무산될 게 뻔했다. 계획이 틀어지는 것만도 미안한데, 규정상 미리 지급한 여행비를 20퍼센트밖에 돌려받지 못하므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칠 상황이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여행가방을 꾸리며 이렇게 당부했다. “당신이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란 것만 안 잊으면 돼.”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예전의 그 사람은 누구였지? 입원하기 전의 일들이 오래 전의 한 시절 같다고, 그러니까 지난봄의 시간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행은 모두 21명이었다. 큰형의 팔순 기념 여행을 왔다는 부부동반 삼형제 팀이 가장 나이

가 많았고 직장동료라는 세 명의 30대 여성들이 가장 젊었다. 세 명의 딸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연신 웃음을 터뜨리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맨 뒤에서 한 몸처럼 조용히 붙어 다니는 모녀 팀도 있었다. 나머지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 커플, 그리고 우리 일행 다섯 명이었다. 여행객들은 3박 4일 동안 서로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 단위로 움직였지만 분명 각기 다른 방식의 여행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행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행선지나 여정보다는 동행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목적이나 취향이나 컨디션이나 역할분담이나 상호관계, 다른 팀과의 견제나 경쟁심이나 우월감이나 손해 보지 않으려는 주관적 기준의 공정함. 그 어떤 것이든 사소한 감정과 권력의 기류 변화에 작용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조금이지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일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았던 것이다. 호텔 조식을 먹고 집합하는 오전 8시반에서부터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다시 호텔 앞에 부러지는 저녁 7시까지의 개인의 선택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친구들이 일본 술을 마시러 나간 밤 시간에 나는 퇴원 환자라는 걸 구실로 혼자 남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았던 건 그들이 숙취로 굶아떨어진 이른 아침에 혼자 나가는 산책이었다. 그 여행에서 좋았던 것은 그 시간뿐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여행을 마치는 데에만 의미를 두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다. 그날은 호텔 앞에서 버스에 탑승해 공항으로 향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일정도 없었다. 나는 지도 앱을 열어 동선을 정한 다음 산책에 나섰다. 시간 여유도 있고 또 마지막 날인만큼 좀 오래 걸어볼 생각이었다. 전날 아침에 걸었던 천변 길을 따라 걷다가 그 안쪽에 있는 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을 가로질러 벗어나니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오래된 동네가 나타났다. 낡은 나무 문짝과 녹슨 함석지붕과 울퉁불퉁한 벽들, 조그만 창문 아래 기대어진 허름한 자전거. 나에게 어쩐지 낯이 익은 골목 풍경이었다. 금방이라도 그 빗바랜 나무 문짝을 열고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내가 나와서 자전거 짐받이에 회색 책가방을 묶을 것만 같았다.

나는 이리저리 방향을 들어가며 이어지는 골목 안을 계속해서 걸었다. 어느 집의 우편함에는 신문이 꽂혀 있었고 어느 담장을 지나칠 때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땀을 흘리며 나는 계속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췄는데, 빈 화분과 썩어가는 나무판자와 대나무 발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쌓인 위에 붙어 있는 커다란 글자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일본어 문장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여섯 개의 한자뿐이었다. 천, 국, 근, 죄, 회, 개.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뜻이 분명했다. 그것은 내가 지나쳐온 풍경과 마찬가지로 눈에 익은 문구였다.

그 순간 불현듯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집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았다. 내가 지각한다면 최악의 경우 20명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골목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이다. 나는 낯선 나라의 아침의 정적을 깨는 발소리를 내며 골목 안을 뛰기 시작했다. 내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숨이 가쁜 나머지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곳은 더 이상 오래 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낯선 여행지의 처음 보는 장소일 뿐이었다. 나를 두렵게 만든 것은 왜곡된 시간이었다. 나는 평면으로 이어지다가 한순간 모양을 갖추고 일어나 꼬여 버린 시간의 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다음 순간 내가 누군가의 꿈속에서 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니, 나를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내가 병실에서 달았던 온갖 보조기구를 매단 채 다음 단계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같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내는 말했다.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 잘된 거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 그 스트레스일 거야.”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왔다. 타의에 의해 일을 그만둔 뒤로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귀찮았다. 그런 나에게 짧은 시간동안 그렇게 많은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있게 된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인 한 새로움은 언제나 생겨난다. 아내의 말대로 다른 삶이 시작되었지만, 오래 전에 시작된 나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흘러가리라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끝>

뼈도둑

전성태

소설가

지명으로는 골짜기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골짜기의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산104번지 일대가 유해 발굴지였다. 아파트 정문에서 등산로 초입에 이르는 비탈에 수풀이 뒤덮은 맹지가 있었다. 그곳에 폴리스라인처럼 금줄이 쳐지고, 칠월 땡벌 아래인데도 죽히 이백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고개를 빼고 있었다.

지훈은 어제 열린 개토제(開土祭)를 취재했다. 그는 산104번지 사건을 ‘페니실린 병’이라는 가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었다. 일찌감치 취재단에 등록해 뉴스 릴리스도 받고 있었다. 유해발굴단의 발표대로라면 오후 쯤 스물다섯 구의 유해 중 최초의 유해가 수습될 예정이었다.

발굴단장의 지휘 아래 중장비가 표토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현장을 메운 인파는 진실화해위원회나 시청과 의회, 시민연대, 연구소와 같은 유관기관 사람들이거나 취재기자들, 인근 시민들일 텐데 해당 유족들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누가 유족인지 알 길이 없었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획관은 산104번지 희생자들의 경우 유족이 피해 신고를 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누구라도 곡소리를 낸다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텐데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 눈에 띄게 동요하는 사람은 없었다.

산책로에서 방송사 카메라들이 여자 노인을 세워놓고 워딩을 따고 있어서 지훈도 카메라를 켜고 조심하 끼어들었다. 노인은 다른 지역 실종자의 유족인 것으로 보였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보도연맹 사건 때 청주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했어요. 이번 발굴을 계기로 아버님 유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칠십 년 전, 군인들이 이 도시에서 이천여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 일군의 군인들이 봉기해 사흘간 도시를 점령했고, 그때 봉기군에 부여했다는 이유로 토벌대가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일부 희생자들은 도시를 두른 산자락의 골짜기 여러 군데에 암매장되었다. 그들은 행방불명자로 남았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다. 죽는다는 의미의 이 관용구가 골짜기로 끌려간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산104번지야말로 사례처럼 보였다.

산104번지 희생자들은 한 마을 주민 스물일곱 명이었다. 저녁밥 지을 무렵에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 학교 담장 아래에서 총기 난사를 당했다. 희생자들에는 세 살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시신 두 구는 당시 유족이 수습하고, 나머지는 인근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미국 선교사가 인부를 고용해 선교회 소유의 이 땅에 가매장했다.

산104번지 매장지는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의 오랜 문헌조사, 탐문조사를 통해 꽤 알려져 있었다. 선교사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발굴되었고, 무엇보다도 직접 시신을 매장한 네 명의 인부 중 생존자 노인을 찾아서 매장지를 특정할 수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노인도 그후 사망해 지금은 없지만 그의 증언에 따르면 구덩이를 서너 개 너르게 파고 네댓 구씩 시신을 침상에 눕히듯 나란히 매장했다고 했다. 일가인 경우 되도록 함께 묻었다.

무엇보다 선교사는 훗날 시신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도록 고무 재질의 뚜껑이 달린 페니실린 1그램짜리 병에다가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은 쪽지를 넣었다. 그걸 품에 안겨 매장했다. 선교사나 인부들은 자신들이 가매장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했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를 줄 몰랐을 것이다. 산104번지 매장지가 특정되고 첫 발굴 대상지가 된 것도 군인들에 의한 암매장이 아니라 민간에 의해 시신이 수습되었기에 가능했다. 아파트 주민들이야 주거지 근방이 그런 끔찍한 곳인지 모르고 살다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마을 토박이 노인들은 매장지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알고 있었다. 개발 광풍에도 칠십 년 동안 매장 현장이 나대지로 그대로 남은 것도 그곳이 흉한 터인 걸 알음알음 알고 있어서였다.

다만 오늘날까지 유족 증언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쉬웠다. 아무래도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많았고, 살아남은 유족이 있더라도 그 일 이후로 이 마을을 떠났으리라 추정했다. 그리고 칠십 년이 지났다. 그해에 태어난 사람이 일흔 살이 되었을 시간이었다. 증언자들도 대부분 그날 일을 전해들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은밀하게 진행된 매장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없었다. 아쉬운 건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족을 한두 사람 섭외해 그들의 사연을 긴 시간의 영상에 담을 계획이었는데 석 달 동안 뻘질나게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도 아직 유족들을 찾을 길이 없었다. 학살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희생자 신고를 접수하면 그때나 당당하게 나타날

까 싶었다.

희생자들이 매장되기 전에 그곳은 선교회의 채소밭이었고, 선교사들이 철수한 뒤로는 한 동안 버려져 있었다. 이주민들이 늘면서 사정도 모르고 텃밭을 일구려고 들기도 했다. 한때는 일부 주민들이 코스모스인지 달맞이꽃인지 씨를 뿌려 밭을 갈아먹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텃밭을 일구는 손을 막지 못했다. 그럴 때 노인들은 땅을 깊이 파지 말고 경작하라고 당부했다.

“빠라도 나와 봐, 동네가 어떻게 되겠냐고.”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몇 년 전부터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산 104번지 학살이 공론화되면서 그곳은 다시 목정밭이 되었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노인들에게 물었다.

“텃밭을 일구다가 일부라도 유해가 발굴이 되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요.”

노인들이 손사래를 쳤다.

“기자 양반이 젊어 뭘 모르는구먼. 정부에서 잘못했다, 딱 인정을 해줘야 인저 나오제 그 전에 나와서 쓰겼어? 못 나오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음게 인저 나오지 않겠더라고. 이나마도 우덜이 말을 내놓는 것도 변한 세상 덕이야. 전에는 입도 뻥긋 못했어. 순 빨갱이 마 이라고 낙인을 찍어부렸는디 숨이라도 쉬고 산 게 용하지.”

그러나 노인 중에는 유해 발굴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누구 본 사램이 있느냐 말이제. 그랬다더라 말로만 전해 들었제, 당장 거기 묻혀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시간은 또 얼마나 흘렀어. 아파트도 들어서고 산복도로도 뚫렸는걸. 인저 누가 알어.”

그러자 다른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그런 소문도 있었잖여. 사건 있고 몇 년 새에 유족들이 하나들 나타나서 몰래 수습해갔다고.”

“아따, 그건 소문 아니더라고. 암도 보지 못한 걸 얘기해서 뭐해.”

지훈은 시간의 아이러니를 느꼈다. 마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능을 발굴하듯 발굴 현장은 얼마간 호기심도 팽배해 있었다. 오후 두 시 무렵에 표토층을 걷어내는 작업이 끝나자 생토층이 나왔다. 포클레인이 철수하고 열 평 남짓한 발굴 현장 위로 천막이 쳐졌다. 인근 대학의 박물관 연구원들로 꾸려진 발굴단이 수작업을 시작했다.

머잖아 유골이 나오고, 페니실린 병도 찾을 수 있으리라 짐작했는데 유골은 생각보다 쉬 발견되지 않았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될 듯했다. 구경꾼들이 저지선에서 물러나 소풍객들처럼 아

파트 담장 가의 나무 그늘로 삼삼오오 물러나 앉았다. 지훈은 노인정에서 만나 낯을 익힌 남자 노인들을 발견하고 느티나무 밑으로 갔다.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더 만나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노인정에서 온 노인들은 모두 셋이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지훈은 반갑게 인사했다. 노인들도 금방 알아보고 맞았다.

“오살나게 더운디 얼른 안 나오네이.”

지훈은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노인들 앞에 세웠다.

“저기를 꽃밭으로 만든 적이 있다고 하셨죠?”

노인들이 두릿두릿 서로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우리가?”

“자꾸 텃밭을 갈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 막느라고 코스모스 밭을 만들었다고요.”

저번에 유해 밭굴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노인3이 입을 열었다.

“꽃밭은 박 씨인가 김 씨인가 철공소 하던 사람이 했제, 아마.”

그러자 곁에 앉은 노인2가 노인3에게 되물었다.

“그 아재가 철공소를 했어, 고물상을 하지 않고?”

묵묵히 앉았던 노인1이 입을 열었다.

“하여튼 꽃밭은 그 사램이 맹글었어. 그도 나가 국민학생 때라 참 먼 일이네. 그 사램도 여기 주민이 아니라 어느 날 불쑥 나타났어. 저 우에 집 같지도 않은 빈 오두막 한 채가 있었는데 거그 들어서 한 삼 년 살다가 동네를 떠났제. 소리 소문도 없이. 그땐 그런 사램들이 뻘어.”

세 노인들의 증언이 조금씩 달랐지만 꽃밭을 일군 사람은 외지인이었던 그 남자가 분명했다.

“그 사람이 왜 꽃밭을 일구었을까요?”

“그거야 묘를 지키려고 그랬겠제.”

노인1은 당연한 걸 묻는다는 투였다.

“외지인이 거기에 스물다섯 구의 시신이 암매장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요?”

“어디서 들었겠제.”

노인1이 시들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인3이 구시렁거리는 소리로 말했다.

“참말로 왜 그랬을까? 어른들이 기냥 흥한 밭을 좋게 맹글었다고 찬사는 했어도 트집 잡는 건 못 봤어. 다덜 흥하지만 지케야 된다는 맴으로 살 때라 그랬으까…….”

“제 생각인데요, 혹 유족이었을까요?”

노인들은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노인들은 자기들끼리 그 사내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맞춰 나갔다. 철공소를 했는지 고물상을 했는지 정확하지 않았다. 인상이 험상궂었다는 노인도 있고, 아이들에게 친절했다는 노인도 있었다. 살림을 했는지 홀몸이었던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오후 다섯 시가 되었다. 작업이 중단되고 발굴단과 유관기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머잖아 현장 브리핑이 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늘에서 나와 현장으로 모여들었다. 발굴단장과 진화위 기획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발굴단장을 맡은 교수는 생토층을 확인한 결과 사람의 손길이 닿은 적 없는 생토이며, 따라서 매장 흔적이 없다고 했다. 진화위 기획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형변화가 심해 더 광범위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아파트 단지와 아래의 산복도로를 바라보았다.

“또 기다려야 한단 말여! 칠십 년이 부족해서 또 기다리라는 소리여!”

군중 속에서 노인 한 사람이 소리쳤다. 그가 유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유족이 아니더라도 이 도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소리였다. 매장지 주변이 묵연해졌다.

지훈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꽃밭을 일군 남자를 계속 떠올렸다. 밤이면 꽃밭에 들어앉아 유골을 하나씩 캐내서 마대자루로 옮기는 사내를. 처음에는 제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형제를 찾으려고 시작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이 커졌는지 모른다. 사내는 유해들을 어떻게 했을까? 어딘가 더 안전한 장소에 모시지 않았을까. 지훈은 고개를 들어 남에서 서로 도시를 에운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더 깊은 골짜기였을까? 아니면 끼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태우고 뺏아서 유골함에 넣고 이름도 찾아 새겼을까.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 자신의 증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면? 유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들쭉날쭉한 구옥들과 불쑥 솟은 빌딩들이, 지지 않는 여름 해를 반사하며 제 형체를 감추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지훈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작업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다. ‘빠 도둑’이었다.

<끝>

• 전성태: 1969년 전남 고흥 출생. 1994년 실천문학신인상 수상. 소설집 『매향(埋香)』, 『국경을 넘는 일』, 『늑대』, 『두번의 자화상』 장편소설 『여자 이발사』, 산문집 『세상의 큰형들』, 『기타 등등의 문학』 3인 르포집 『길에서 만난 세상』, 평전 『김주열』 등이 있음. 신동엽문학상, 채만식문학상, 오영수문학상, 현대문학상, 이효석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아름다운작가상 수상.

순대국 편지, 그래서

김용택

시인

함박눈 내려요
순대 국 먹으러 가자고 하고 싶어요
꼭 순대 국이 먹고 싶은 건 아니구요
그냥 지금 몸이 좀 아프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이 내 얼굴 보면서 걱정 해줄 테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침의 버드나무가지

김용택

시인

피꼬리 한 마리가 강변으로 날아와 늘어진 버드나무가지에 앉는다

나무 가지가 능청능청 휘어진다

한 마리가 날아와서 조용히 산으로 데려간다

시인과 은행

나희덕

시인

시인은 은행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주 가야 한다

은행 빚을 갚아온 삼십 년 동안
대출 담당자 앞에 앉을 때마다 느껴야 했던 감정들,
끝없이 비워내야 했던 생각들,
빚을 갚기 위해 거리에 버린 시간들,
열차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종종거리던 날들,

은행 금고에는
그 저당 잡힌 감정들과 생각들과 시간들로 가득할 것이다
물론 미래의 시간도 거기 갇혀 있을 것이다

시인은 이따금 환전하러 가기도 한다
빚이 남아 있다고 해서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환전해주는 돈은 왜 늘 새것일까,
빳빳한 달러화를 받아들고
시인은 그 달러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잠시 헤아려보지만 알 도리가 없다

자신이 곧 국경을 넘어
돈을 물어나르는 매개가 되리라는 것밖에는

시인은 은행을 나와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걷는다
낙엽을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고 했던 시도 있었지
낙엽들 사이로 은행알이 지뢰처럼 숨어 있고

시인은 천천히 걷고 있다

터진 은행알을 밟지 않으려 애쓰면서
은행에 저당 잡힌 감정과 생각과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정작 은행에 대해 시 한 편 쓰지 못했다고 중얼거리면서

‘당신들의 천국’과 윤석열 레짐

류보선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현재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의 가장 강고한 적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그것이다. 윤석열 레짐. 어디 기본소득의 적일 뿐이라. 윤석열 레짐은 지속가능한 지구, 모두를 위한 지구로 전회하려는 우리 사회 모든 혁신적 기획들의 걸음걸음을 막아서는 높은 벽이자 우리 역사 전체를 자본주의 초창기의 어느 순간, 어떤 면에서는 인류사의 초창기로 퇴행시키는 거대한 역류이다.

‘공정과 상식의 구현’을 요란하게 구두선으로 내걸고 윤석열 레짐이 출발한지 1년 8개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겨우 알게 되었다. 먼저 읽어낸 이가 많으리라. 하지만 내겐 시간이 필요했다. ‘설마!!!’ 때문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윤석열 레짐의 실체를 감지하기는 했다. 짐작은 했지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윤석열 레짐의 갈팡질팡, 좌충우돌,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아전인수, 지록위마를 술하게 보면서도 설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한 나라의 정부인데 하는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정말 그들은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오로지 자신들만의 조직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고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공정과 비상식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의 조직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수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의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한 개인을 죽음이라는 막다른 벼랑으로 밀어부칠 정도로 집요하게 적법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그들의 조직에 관계된 자들이라면 그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어떤 비난을 듣건 법의 작동을 거두어들였다. 그 결과 이제 법은 ‘만인에게만 평등’(노회찬의 말)하게 적용되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줌 권력자와 그 권력자의 호위무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현재는 무법천지보다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소수의 권력자에게 무한정의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초법천지 혹은 탈법천지가 되었다고나 할까. 정권 초기부터 즐기게 이런 짓을 벌였건만 우리는, 아니 우리 중 대부분은, 적어도 나는 이들의 말과 말 사이, 말과 정책 사이, 정책과 예산 사이에 어떤 경향성, 법칙성, 이데올로기, 그리고 철학이 있으려니 했고, 혼란 속에서 그걸 찾고자 골머리를 앓았다. 찾아지지 않았다. 한데 1년

8개월이 지난 이 즈음 드디어 그 정체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찾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 레짐에겐 그런 명분이나 철학 따윈 없었다. 그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그들의 조직을 위한 것들을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길 뿐인 것이다.

돌아해보면 실패하기 힘든 정권이었다. 이 정권의 잠재성을 높이 사서가 아니었다. 반대로 이 정권에 대해 큰 기대를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망치지만 않아도 칭찬받을 정권이었다. 선거 전 대권행보 때부터 그 어떤 정치철학도 볼 수 없었다. 법을 맨 앞에서 집행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철학도 없어 보였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내밀었다. 이곳에서 말한 것과 저곳에서 말한 것이 서로 충돌해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 어떤 마스터플랜도 없어 보였고 그것을 실현할 액션플랜이란 애초 개념조차 없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분열적인 정책을 드문드문 내놓으면서도 태연했고 의연했다. 몇몇 사람들은 설마 그가 발화하기 힘든 큰그림을 가지고 있겠지 하고 스스로 알아서 오인했고 그를 의심하는 주권자들 대부분은 이 중심 없는 오락가락에 짙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진보를 선택하지 않는 예의 그 지지자들과 전임 정권의 시행착오에 과민반응한 유권자들, 그리고 진보 진영 후보자의 애매한 대안에 지레 실망한 유권자들의 자멸적이고 자학적인 선택에 힘입어 가까스로 당선됐다. 우려가 크긴 했지만 절망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역시 윤석열 레짐에 기대가 걸어서가 아니었다. 나를 믿는 구석이 있었다. 망칠 건 뻔한데 그래도 나라의 근간은 유지되겠거니 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그 어떤 퇴행적 정책을 펴더라도 이제까지 쌓아온 시스템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버텨주려니 했다.

현상 유지만 해도, 아니 조금만 망가뜨려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정권이었던만 윤석열 레짐은 출범한 첫날부터 연일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쏟아내느니 망작인데, 아뿔싸!, 게다가 쉬지도 않았다. 참 성실했다. 막무가내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 법정 노동시간의 연장 시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 부자감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축소 및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 확대, 보편복지의 축소와 선별복지 확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대미 대일 종속 강화, 러시아 및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결 구도 강화, 노골적인 편파 수사와 무분별한 압수 수색, 삼권분립의 와해, 이태원과 오송 참사 등 잇단 안전사고 발생과 원인 규명과 반성 없는 대응, 간호사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정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배우자의 국정 개입 의혹, 감사원과 권익위 등 권력 견제 기구의 권력 보위 조직으로의 사유화, 방통위·방심위 장악을 통한 공영 방송 사유화와 노골적인 언론 탄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한 노골적인 반정부 세력 탄압, 재벌 몰아주기 경제 정책과 재벌을 동원한 선거운동, 잼버리 참사와 엑스포 유치 모욕적 참패, 노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 R&D 예산 대폭 삭감 등등.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보니 윤석열 레짐이 들어선 이후 벌어진 상황을 ‘얼떨결에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의 난동’(유시민)에 비유한 이가 있기도 하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목이 있다. 도대체가 모

든 정책과 시스템이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중구난방, 표리부동, 언행불일치, 용두사미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바람직성과 방향성은 둘째치고 일관성도 없다. 게다가 합법성의 테두리도 간단하게 넘 어설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양립할 수 없는 말을 그때그때 내던지고도 태연한가 하면, 마치 역사적 결단을 내린 듯 몰아치다가 뒷일은 내몰라라 하기가 다반사다. 나라 전체의 살림이 윤석열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가 하면 오랫동안 다듬어져 온 계획이 윤석열 개인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뒤집히기도 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최고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무언가가 떠들썩하게 시행되는 듯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어떤 것은 또 행정 권력과 검찰 권력 모두가 달려들어 집요하게 매달린다. 이렇게 거의 모든 일이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시작되는데 대통령의 말이 떨어졌다면 행정조직 전체가 그것을 시행하는 흥내라도 내야 할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그러다가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 어느새 모든 일이 유야무야된다. 나라가 이런 꼴이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얼떨결에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의 난동’에 비유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레짐을 ‘코끼리의 난동’에 비유하는 것은 윤석열 레짐의 무대책, 무책임, 무계획, 무 능력 행정을 이해하는 데는 효율적이기는 하나 윤석열 레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읽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레짐이 ‘난동’을 부리고 있기는 하나 무차별적인 난동을 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석열 레짐의 난동은 정확하게 그간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축적해온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교묘하게 집중되어 있다. 반면 그 와중에 견고하게 지켜내는 영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간 유명화된 정책들을 집요하게 귀환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윤석열 레짐에서 역사적 퇴행을 읽어내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간 쌓아온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무참하게 짓밟는 반면 혹독한 시행착오와 엄밀한 역사적 검증을 거쳐 폐기처분된 그것들을 집요하게 불러들이다 보니 윤석열 레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하나같이 과거 독재정치의 망령들이거나 잔여물들인 경우가 많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의 퇴행을 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들은 오히려 관대한 편에 속한다. 노태우, 전두환 정권을 거쳐 박정희, 이승만 시대로의 퇴행을 말하는 이들도 여럿이다. 더 나아가 대한제국 말기를 떠올리는 이도 있고 이조시대를 말하는 이도 한 두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짐이 곧 국가’였던 절대왕정 시절을 넘고 넘어 태곳적 ‘원초적 아비’들을 떠올리는 이들도 부지기수다¹⁾.

그렇다. 윤석열 레짐의 ‘난동’은 결코 무차별적 난동이 아니다. 분명한 방향 혹은 경향성이 있다. ‘난동’ 후 분진이 걷히니 하나들 보이게 되었다고나 할까. 윤석열 레짐이 1년 8개월 동안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것은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피, 땀, 눈물’을 흘려가며 쌓아온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발판들이

1)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거대한 시차(時差, 視差)에 시달리는 것은 윤석열 레짐이 역사가 진화하면서 힘겹게 폐기처분한 과거의 악령들을 전방위적이면서도 즉흥적으로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 반면 그들이 계획과 계산, 전략과 전술에 의한다기보다는 본능 혹은 충동에 따라 불러들이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그간 ‘피’ 흘려가며 폐기처분한 그것들이기도 하다.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레짐이 복원하고자 하는 왕국은 명백하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 있는 사회다. 또는 힘을 가진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회다. 윤석열 레짐은 가진 자들이 지금처럼 많은 것을 독점하게 된 것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공권력. 그러니까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라고 법적으로 위임받은 공공선적인 폭력을 자기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이 쌓은 능력 때문이라고 믿는 듯하다. 또한 그들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나마 살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가진 자들이 더 갖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고, 공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헌신 덕분에 이 정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은 누려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아니, 존중 정도가 아니다. 절대권력을 누대로 누려야 한다. 그들에 따르면 그 상태가 이어져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가능하다.

윤석열 레짐이 본능적으로 쫓는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더 가질 수 있는 사회’는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죽’이는 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군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윤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최소한의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가 고착되어서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더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다른 한편으로는 ‘없는 존재들은 더 극한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오징어게임> <기생충>에서 보듯 어떤 계급은 과잉의 자산 때문에 권태에 빠지고 어떤 계급은 목숨을 걸고 처참한 생존게임을 벌여야 하는 연옥으로 전락할 것이며, 급기야는 노동의 과정과 결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는 계급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전방위적으로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과잉의 자산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위태로워져 가는 지구로부터 빠져나갈 꿈을 꾸는 ‘최후의 밤’을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말해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 빼고 어서 다 망해라’(태평천하)라는 가언명령의 변태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역사지리지이건만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없이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언명령에 대한 윤석열 레짐의 믿음은 확고한 듯하다. 진짜 진심이다. 너무나 진심이어서 그들의 대부분의 정책이 무대책, 무계획, 무책임, 무능력의 오합지졸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부분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더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열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마다하지 않을뿐더러 집요하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태세다. 물론 ‘가진 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가질 수 있는 사회’라는 궁극적으로는 공동동망의 길을 고집하다 보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외면한다. 아니 외면한다기보다 윤석열 레짐에겐 그들의 정책이 불러온 재앙과도 같은 분열과 균열이 시선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야 하리라. 윤석열 레짐에겐 오직 ‘가진 자들만의 태평천하’ ‘가진 자들만의 천국’이 중요할 뿐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건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할 정책을 멧돼지처럼 몰아붙이기만 하는 탓에 한국 사회 전체가 벼랑으로 치닫는 징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레짐의 질주는 그라나 멈출 기세가 없다. 그것만 해도 잔뜩이나 한국 사회 전체가 위태로운데 여기에 윤석열 레짐의 독특한 국정 운영 스타일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레짐은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 집행하지 않는다. 대신 먼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을 벌여놓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럴 듯한 개념으로 개념화한다. 전체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일을 마치 심오한 철학에 바탕한 것처럼 위장하고, 충동적으로 실행에 옮긴 일을 마치 심오한 대의명분을 위해 선택한 결단으로 치장한다. 그 과정에서 말과 행동, 정책과 예산, 마스터플랜과 액션플랜, 중장기계획과 단기계획, 대의명분과 사적 이익 사이에 거대한 착종이 발생한다. 예컨대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고속도로를 노선을 무단 변경해놓고 그것을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것이라 강변한다. 더 나아가 전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지역민의 민의를 조작해내기까지 한다. 국가기구에 의한 지록위마의 일상화라고나 할까. ‘가진 자들의 천국’이라는 망상에다가 지록위마의 일상화라는 전대미문의 통치술이 덧붙여지면서 윤석열 레짐은 1년 8개월만에 우리 사회 전체를 그야말로 블랙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레짐의 위기가 위기인 것은 윤석열 레짐의 위기가 단순히 경제적 지표상의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레짐의 위기는 경제적 지표의 추락 외에 크게 두 가지 연유로 한국 사회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첫 번째 연유는 윤석열의 ‘우리만 빼고어서 다 망해라!’로 요약되는 경제 정책이 우리 사회 전체를 ‘사랑이 없는 욕망’(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각축장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차가운 계산적 주체로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중요하니 한 번 더 반복하기로 한다. 우리 대부분이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듯 윤석열 레짐이 출범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자감세(재벌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건전재정이다. 윤석열 레짐은 출범 이후 오랫동안 준비한 듯 줄곧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지구 전역에서 보다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적인 세금제를 도입한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부가 사회구성원 전체가 동참해서 만들어낸 생산의 결과물을 비대칭적으로 혹은 독점적으로 보다 많이 전유 혹은 점유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것이라는 인식의 반영이자 그 과잉의 독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공선적인 취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레짐은 그 오랜 누진세적 전통이 보다 많이 소유한 자들이 아무 제한 없이 더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윤석열 레짐의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존중받아야 할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는 장치라고 믿는다. 그리고 뻔뻔하게 가진 자들이 더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며, 그 첫 출발점으로 과감한 부자감세를 시행한다. 그 결과 국가가 공공선의 구현을 위해 사용하던 세수가 비참하게 축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과감한 (부자)감세 정책으로 공공선의 영역,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 분야에 사용할 예산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상황이 뻔한데도, 여기에 덧붙여 윤석열 레짐은 건전재정 기조를 줄기차게 밀고 간

다. 세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국가가 당연히 써야 할 돈, 써야 바람직한 돈을 쓸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그들의 건전재정에 대한 믿음은 가히 종교적 수준에 가깝다. 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면 지출을, 그것도 특단의 수준으로 줄여야 할 터, 실제로 윤석열 레짐은 부자감세로 인해 생긴 그 엄청난 손실을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복지 예산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자산인 R&D 예산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식으로 벌충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긴축재정이 윤석열 레짐의 출범 이후 일상화된 경상수지 적자와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국가재정의 투입이 요구되건만 어떤 일인지 윤석열 레짐은 태연하게 국가의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줄기차게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건전 재정을 위해 국가가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자 내수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여기에 ‘단순, 무식, 과격’한 가치 외교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폭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윤석열 레짐은 사회구성원들의 목을 죄어오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레짐의 관심사는 일편단심 가진 자들이 더 소유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위해 한순간 한국 경제 전반을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동산 버블을 키워가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물론 간혹 위기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석열 레짐이 도입하는 정책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민생을 위한다면 결코 끌어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윤석열 레짐은 그들만의 태평천하가 꺼지는 것이 두렵지, 그들의 태평천하를 위해 한국 경제 전반이 붕괴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부동산 버블을 더 키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건만 윤석열 레짐은 오로지 불로소득 계층이 환호할 만한 무분별한 성장과 개발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하지 않고 과잉의 독점적 소득을 올리는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간 부동산 버블을 더 크게 팽창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꼴이다. 한데 문제는 이 버블은 국가의 막가파식 개발 정책만으로는 그리고 이미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쌓아놓은 그들만으로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동료시민(?)’이라는 희생양이 필요하다. 윤석열 레짐은 ‘당신들의 (버블)천국’을 위해 끊임없이 동료시민(?)들을 현혹한다. 모든 ‘동료시민’을 ‘영끌족’으로 변질시키기 위해 ‘지금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얼마든지 판돈을 빌려줄 테니 이 도박판으로 들어오라’라고 집요하게 유혹하거나 ‘그러다 벼락거지 될래’라고 위협한다.

‘(소수의)우리를 위해 어서 다 망해라’ 식의 편파적인 난개발 성장 정책과 ‘이 정도로 고마워해’ 식의 개평주기 복지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윤석열 레짐의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국민 모두의 생존과 안전 보장이라는 국가의 역할과 국정운영 총책임자로서의 책무를 태연하게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큰소리다. 목소리도 큰데 말도 아무 말이다. 기후정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기후강패국가에서 기후약마국가로 일로매진 타락하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후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노라고, 앞으로는 더 그러하겠노라고 말한다.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 소외된 계층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윤석열 레짐의 정책 기조는 ‘민생’이라는 말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다.

어쨌든 윤석열 레짐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의 보장을 조건으로 합법적 폭력과 예산의 독점적인 집행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개인의 이익이나 그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거칠게 행사하면서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면 이는 급기야 국민이 국민이 져야 할 의무를 거부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국가라는 운명공동체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도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레짐은 나라 전체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상생하고 공진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정글로 타락시켜가고 있다. 만약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가진 자는 무한정 소유하게 되고 못 가진 자는 절대가난 속을 저회하는 디스토피아로 급전직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 디스토피아적 공간은 혐오와 증오, 오만과 비굴, 탐진과 공포의 정동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아수라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자도생의 길을 강요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어쩔 수 없이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계산적 주체(‘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부터 살아남자!’)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터, 윤석열 레짐은 ‘아니, 벌써’ 우리 모두를 그런 냉혈한으로 몰고가고 있다.

윤석열 레짐의 자멸적 ‘난동’이 위태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난동’이 우리 모두를 이미 벌써 ‘냉소적 주체’로 전락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진즉부터 우리 모두가 충분히 절감하고 있듯이 윤석열 레짐의 통치술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사정기관과 레거시 미디어를 동원한 비판(혹은 대안, 혹은 대항) 담론과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다. 윤석열 레짐은 국가의 모든 사정 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등)과 레거시 매체들과 협력하여(혹은 동원하여) 그들 외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 총력을 다해 총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레짐은 그들의 전도된 능력주의와 통속화된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모든 담론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탄압한다. 윤석열 레짐은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생명체도 존엄한 생명체로 공존할 길을 모색하는 모든 움직임들은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한 공산전체주의’이거나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로 규정한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라는 이념에 기반한 그들을 공공선으로 획정하는 한편 모든 생명체의 공생, 공유, 공진화의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들을 공공의 적으로 구획한 후 ‘공유인으로 사유하고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을 탄압하고 척결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적인 것은 그 대결 혹은 대적의 방식이다. 윤석열 레짐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움직임들과 정책 대 정책으로 대적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의 사정 기구를 동원하여 사회로부터 유폐시키고자 획책한다. 말로는 윤석열 레짐의 비판적인 세력들의 이념, 그리고 이들 담론의 기저를 ‘공산전체주의’라고 공격하지만 그 비판 세력을 이념과 관련된 행위로 탄압하지 않는다. 윤석열 레짐은 그들의 비판 세력을 온갖 법을 동원해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지만 정작 그들의 정적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때는 한때 권위주의 정권에서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던 전가의 보도였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도 않

는다. 그렇게 되면 이념 대 이념, 정책 대 정책의 대결의 양상을 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윤석열 레짐은 그들이 대결하는 세력의 이념과 정책 때문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찍어놓은 이들을 불러들여 없는 죄를 만들거나 먼지털이식 수사로 만들어낸 다른 죄로 이들을 죄인으로 만든다. 다시말해 윤석열 레짐에서는 민주·인권·진보를 말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공산전체주의’라는 굴레를 쓰게 되는데, 정작 이들을 처벌하는 죄는 이들의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윤석열 레짐은 민주, 인권, 진보를 말하면 그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 인권, 진보를 말하면 그것을 실행한 어떤 행위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 인권, 진보를 말하는 자들을 불러다 어떤 식이든 죄인을 만드는 식이다. 반면 윤석열 레짐 범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자신들의 레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무죄로 만들어낸다. 그 자들이 비록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큰 죄를 짓더라도 기소독점주의를 활용하여 모든 것을 죄 없는 것으로 만든다. 웬걸! 오히려 그런 자들을 태연하게 최고위직의 자리에 앉힌다. 윤석열 레짐은 당파적이지도 않다. 노골적으로 편파적이다. 자신들에 레짐에 속한 자들은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않고, 혹은 죄가 있는 자도 죄가 없는 자로 덮어버리고 반면 민주, 인권, 진보를 말하는 존재들은 죄가 없어도 죄인으로 만들어낸다.

이처럼 윤석열 레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하고 이미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마땅한 세상에 동의하거나 순종하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을 편파적인 법 집행을 통해 처벌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윤석열 레짐에서의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지 않다. 심지어 ‘만 명에게도 평등하지 않다’(노회찬). 평등한 법 집행을 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편파적인 법 집행을 숨기지도 않는다. 말 그대로 노골적이다. 윤석열 레짐에 동조하거나 순종하면 무죄 정도가 아니라 기소조차 하지 않으며 민주, 인권, 진보를 외치는 존재들은 그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처벌한다. 이러한 편파적 법 집행을 노골적으로 전시하는 방식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명령한다. 민주, 인권, 진보에 관해서라면 입에 올리지도 말라!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 한마디로 윤석열 레짐은 편파적인 법 집행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권력이 있는 자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가진 자 더 많이 소유하는 사회’를 위한 담론만을 절대화하고 이밖에 다른 목소리들은 철저히 음소거(강유정)시키고자 한다.

이런 노골적이고도 편파적인 법 집행은 사회구성원 대다수를 분노케 하지만 그렇다고 그 대다수가 윤석열 레짐에 불복종하고자 저항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보다 많게는 악의 평범성을 구현하는 순종적 신체가 된다. 그렇다고 이 순종적 신체들이 윤석열 레짐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느냐 하면 그 역시 그렇지 않다. 안다. 아는데 순종한다. 알면서 순종한다. 정의롭지 않지만 불복종하면 자기만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른다고 타인은 물론 자기까지를 기만하고 순종한다. 일종의 냉소적 순종적 신체가 되는 셈이다. 맹목적 순종적 신체는 진실을 알 경우 악에 대한 배신감과 배덕감으로 각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냉소적 순종적 신체들은 선으로 돌아오기 힘들다. 부정의 편에 상당 부분 야합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이 정의로워지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라는 자들이 옳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의가 이기면 곤란해.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거든.’ 이런 식이 된다. 결국 냉소적 순종적 주체는 겉

으로는 선의 회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의 존속에 기투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글의 초반부에서도 말했지만 윤석열 레짐이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펴 보았듯 결코 길지 않은 기간에 참 부지런도 떨어졌다. 많은 것을 망쳤다. 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다듬어온 모든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했으며 심지어 메피스토펠레스 모양 인간의 영혼마저 잠식해가고 있다.

만약 이 진단이 윤석열 레짐의 실재에 대한 나름 타당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글의 처음을 다시 불러올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의 가장 강고한 적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그것이다. 윤석열 레짐. 어디 기본소득의 적일 뿐이라. 윤석열 레짐은 지속가능한 지구, 모두를 위한 지구로 전화하려는 우리 사회 모든 혁신적 기획들의 걸음걸음을 막아서는 높은 벽이자 우리 역사 전체를 자본주의 초창기의 어느 순간, 어떤 면에서는 인류사의 초창기로 퇴행시키는 거대한 역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 윤석열 레짐 이제 겨우 3년 4개월 남았다고. 결코 길지 않다고. 그러니 견뎌보자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망하게 두자고. ‘최후의 밤’의 심연을 겪어봐야 아름다운 지구를 꿈꾸는 혁신적 주체로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있을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그런 견해 가진 이들의 손을 뿌리칠 생각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그것은 내가 생애적인 비관론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냉소적 주체가 혁신적 주체로 거듭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는 내 나름의 역사적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단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는 통치되지 않겠다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고, 꿈임없이 속삭이는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레짐 이전부터 줄곧 그려왔던 각자의 대안들을 거듭거듭 천명하는 것이다. 서두르자. 오래 지체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면 많이 늦진 않았다.

신승철과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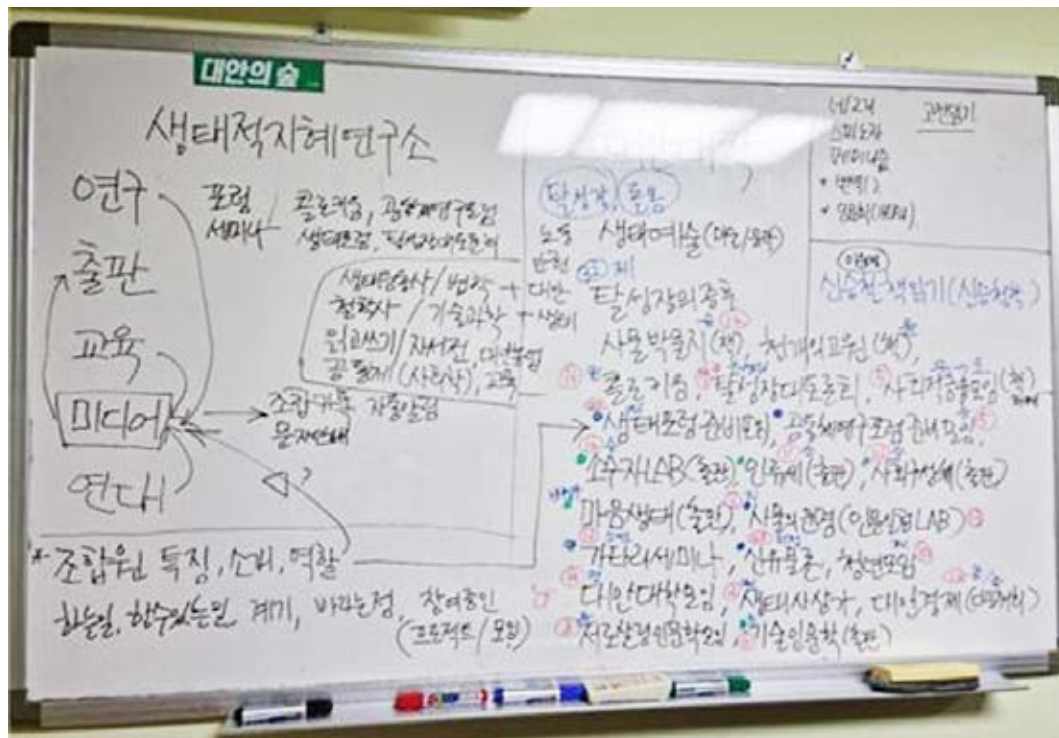
홍승하 생태적지혜연구소 조합원

1. '연결자' 신승철

폭염과 홍수와 화재, 묻지마 범죄가 난무했던 지난 여름이었다. 환멸의 정치에 몹시 지쳤던 어느 일요일,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본인 부고문자를 받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 통화한 지 며칠 안 된 때였다.

그의 갑작스런 부고에 망연했던 것도 잠시, 장례식과 그 이후 그를 추억하는 많은 자리에서 저마다 그의 거부할 수 없는 호출과 제안과 기다림의 낮은 소리를 기억하며 그의 존재는 살아생전보다 더 자주 출몰하곤 했다. 우리는 그가 맺어놓은 수많은 연결망을 보물찾기하듯 발견하고, 그가 펼쳐 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어떻게 그 많은 모임을 그렇게 촘촘히 엮어낼 수 있었는지, 그 많은 기획안들을 만들어냈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바빠짐을 감수하고 있다. 신승철, 그는 스스로를 '연결자'로 규정지은 만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와 되기를 실천하며 공동체에 스며들었고, 그가 사라진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북극성을 잃은 듯' '벼랑 끝에 선 듯' 크나큰 상실감을 주었다. 어느덧 물러날 것 같지 않은 더위도 한풀 꺾였고 그의 빈자리도 조금씩 채워지고는 있지만 그의 갑작스런 부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 쯤 다람쥐회에서 대안경제공부모임을 시작했을 때였다. 70년대 노동자서민의 금고로 출발했던 다람쥐회,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고 공동체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미궁에 빠진 듯 무기력증을 겪고 있을 때였다. 공동체의 길로도 한계가 있고, 유지하고 버티기에는 몸집이 작지 않아 피로도가 심했던 다람쥐회에 공유경제와 탈 성장,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전환을 들고 나타난 신승철. 자조금융, 혹은 대안금융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에코 포인트를 기후화폐로 전환하여 기본소득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에 기여한다면 어떨까? 사회적 경제체들과 지역소상공인들과 함께 네트워크도 만들고 자체플랫폼도 구축하고... 이런 계획들을 의논해 왔지만,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에는 실무능력도 부족했고, 여전히 다람쥐회의 근본 물음은 아직



신승철 유고 후 조합원들이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사업내용

진행형인데, 그가 가버리고 없다니...그와 함께 공부모임에서 이행과 전환의 필수요소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하곤 했던 기억을 소환해 본다.

2. 생태적지혜에 스며들다

신승철, 그가 운명한 후 40여 권의 책과 논문 등, 수많은 유고 글들을 보며 그 양과 깊이에 적잖이 놀랐다. 그의 저서들을 이제야 조금씩 들여다보며 그가 가진 확신과 신념을 조금씩 알아나가고 있다. 신승철, 그는 맑스주의자에서 생태주의자로, 문래동에 ‘생태적 지혜’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다양한 공동체와 이론들과 실천들을 접목시키고 많은 사람의 동행을 구했다.

“생태적 지혜는 커먼즈Commons로서의 공유지에서 받아했던 약초, 벌레 퇴치, 식생, 발효, 요리, 저장 등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지혜는 연결망의 지혜이자 정동과 살림, 돌봄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시대의 개막은 절기살이, 식생 등 생태계 전반의 순환과정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적 지혜가 아닌 미래적 지혜에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적 지혜는 지나친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아니라, 적정기

술, 녹색기술, 친환경기술 등의 도전, 창조, 모험에 대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¹⁾

그가 물들이고자 했던 담론의 근원지는, 산업자본주의의 쇠락에서 잔존하고 있는 문래동의 철공소들과 쇠락의 빈터에 새순을 틔게 하고 낡은 공업의 골조에 예술의 옷을 입히려 스며든 문래동 예술촌이었다. 생태적 지혜가 넘실대는 그곳에서, 약 2년여의 다람쥐회 경제학습모임 후 신승철은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내게도 조합원이 될 것을 권유했었다. 90년대, 맑스주의 이후 여러 포스트주의들의 난해한 흐름을 스캔하듯 읽고 덮은 이후 ‘사회주의적 이상’만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던 내게 신승철의 들뢰즈, 가타리의 철학과 분자혁명에 쉽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의 생태주의자로서의 지혜는 물 흐르듯 넘쳐서 나에게로도 흘러왔던 것 같다.

3. 창조적 욕망의 토대가 될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이미 공론화된 바, 소득과 노동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신승철은 그의 여러 저서에서 이 기본소득을 여러 번 언급한다. 그 중 욕망가치론에 주목한 신승철은 다양한 비노동영역의 욕망가치에 주목한다. 그 욕망가치가 발현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창조적 가치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이후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저는 욕망가치에 입각해서 색다르게 전망해 봅니다. 욕망의 차원은 ‘기호’와 ‘기계’의 단계로 이행해 있습니다. 어쩌면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게임에 빠져 있는 청년세대를 도덕적 해이라고 훈계하는 기성세대를 떠올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욕망이 주는 활력과 생명에너지가 공동체경제와 집단지성의 성숙에 엄청난 토양으로써 작용하면서 기본소득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평을 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욕망해도 괜찮아”수준의 범생이과 같은 담론이 주를 이루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야성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욕망이 아직까지 기억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²⁾

보장된 급여도 없고, 원고료나 강의료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신승철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 신승철이 그의 반려인 이윤경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쓴 책 『욕망자본론』에서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욕망가치와 다양한 창조적인 생산가치의 가능성이 흥미진진하다.

1)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창립선언문 일부. 2019.6.28

2) 신승철 저 『욕망자본론』(알렘, 2014) 2부 7장.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 까닭」 중



신승철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늘 무언가를 제안했다. 000선생님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우리 집, 기본소득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예전에는 윤경씨가 제게 일주일에 7만원이나 되는 용돈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주었지요. 그때 저는 군것질도 하고 후배들에게 자장면도 사주었고, 급하면 택시도 타면서 유용하게 잘 썼지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윤경씨가 용돈 공급을 끊으면서 저는 스님이나 수행자 모드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생활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처럼 용돈이 두둑히 있다면 뭔가 색다른 구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술도 안 마시고, 딱히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당신과 함께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상황인지라 딱히 용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욕망 가치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용돈이라는 걸가지로 넘어갔군요. 예전에 용돈을 챙겨 주던 윤경씨를 그리워하며”³⁾

4. 탈성장, 생태적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소득

신승철은 오늘날의 정동자본주의 속에서, 노동과 소득에서 배제된 소수자나 비노동 영역,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부불노동, 돌봄노동에 주목한다.

3) 신승철 저 『욕망자본론』(알렘, 2014) 2부 1장 「마르크스가 알지 못했던 욕망가치」 중

“기본소득은 ‘고용된 노동’이라는 허구상품 배후에 있는 다양한 정동노동의 실존에 기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고용된 노동의 이면에서 다양한 비물질적인 노동, 정동노동, 욕망노동, 정상화노동, 돌봄노동 등이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정동의 가치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삶과 실존, 자유, 사랑, 욕망의 거대한 지평과의 접촉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과 사랑의 변화를 전망해 볼 수 있다.”²⁴⁾

기계가 사람들의 노동을 많은 부분 대체하는 현실에서 고용노동의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정동자본주의의 플랫폼에 날마다 무급으로 정동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재생산을 위한 여러 노동들, 돌봄과 치유의 노동들, 다양한 창조적인 욕망노동에 대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고용노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촉즉발의 위험 속에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은 탈성장밖에 없는데, 탈성장 담론이 많은 사람들, 성장을 필요로 하는 세대, 계층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점도 주목한다. 불평등이 거세된 풍요라 할 지라도 늦추고 절제해야 할 시점에 탈성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라는 것이다.

그는 ‘탈성장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동해방, 활력해방, 욕망해방, 돌봄해방의 판을 구성하는 이행의 구성요소’²⁵⁾라고 얘기했다.

5.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한 생태적 지혜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가능성을 경험했다. 기본소득을 위한 자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주권화폐론과 국토보유세 등 세수 확대 방안 등이 있다.

신승철은 통화주의의 한쪽 면 MMT(현대경제이론)의 주권화폐론⁶⁾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양적 완화를 통한 화폐발행을 은행이나 자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그린뉴딜의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기후금융 등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4) 이호찬·권희중·신승철 저 『우리의 욕망을 공유합니다』 (한살림, 2020) 2부다. 「삶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중 ‘정동노동과 기본소득’ 부분.

5) 계간 《기본소득》 2023년 봄호. 「정동자본주의 하에서의 기본소득」 (신승철) 중

6) 제프크로커 저 유승경 역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2021) “기술발전으로 산출에 비해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득을 보충하고 공공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채 아닌 주권화폐가 필요하다.”

세금을 통한 기본소득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 통화주의를 통한 기본소득은 정책 결정의 과정이 완료되면 좀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화주의로 나아갈 때 ‘정동의 가치’와 ‘욕망가치’에 대한 고찰이 없이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현 상황에서, 기후부정의와 부의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한 유력한 방법은 통화주의일 수밖에 없다. 돈이 기업과 자본에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나눠주는 상황이 더 탈성장에 가까운 통화주의를 의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MMT와 같은 통화주의를 성장주의의 혐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후금융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⁷⁾

신승철은 기본소득 형태의 기후화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후화폐가 기후금융으로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안했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를 배당하는 방식도 그중 하나의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스위스는 2008년부터 국가가 탄소 감축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화석연료를 소비한 만큼 세금을 걷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세금의 3분의 1은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개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3분의 2는 n분의 1로 나누어 스위스 거주자 모두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를 덜 소비한 기업이나 가정은 세금을 덜 내고 더 돌려받게 됩니다. 에너지를 아낄 이유가 충분해지는 거죠. 스위스에서 한해 동안 거둬들이는 탄소세는 2019년 기준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⁸⁾

기본소득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더 많은 논란과 정체를 겪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혹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처럼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현실화된다면 적어도 기후위기 상황에 탈성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연착륙하고 신승철의 ‘정동해방, 활력해방, 욕망해방, 돌봄해방’의 새 판을 여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인이 되어버린 ‘생태적인 삶, 대안적인 삶’을 선택했던 신승철의 삶에 기본소득이 더해졌다면, 그의 지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7) 웹진 《생태적지혜》 「그 많던 조개껍데기 화폐는 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 MMTModern Monetary Theory와 기본소득」(신승철, 발행 2019년 10월 25일 (<https://ecosophialab.com/>))

8) 권희중·신승철 저 『10대와 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철수와 영희, 2021) 3부 8·3장 「에코마일리지와 기본소득」 중

“이제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화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

난 지금 도망가고 있다. 현실이 싫을 때마다 핑곗거리를 찾아 해외로 간다. 이 유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또 무기력이라는 친구가 찾아온 것 같다. 내가 늘 데리고 다니는 친구이지만 가끔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때가 있다. 2014년 8월 몬트리올 BIEN 대회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였던 것 같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발표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무렵, 나에게 기본소득 3인방은 소리 없이 문득 찾아왔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화균아! 몬트리올 국제 학회에 기본소득 멤버들이 가는데, 너도 가서 도와줄래?” 한국에서 종우 선배에게 몇 년 만에 카톡을 보내왔다.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지만, 대전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창립한다는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있었다. 나같이 미천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네” 하고 말해버렸다. 3년 차 유학 생활이 무료했고 무조건 어딘가로 떠나고 싶었던 터였다.

활동가 3인방을 몬트리올 공항에서 처음 만났다. 인사하고, 그날부터 바로 철기라는 몬트리올 유학생 후배 집에서 화려한 일주일간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박선미 안효상 금민 3인을 만난 후에야, 다음회 BIEN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할 일은 이들이 가져온 팸플릿을 활용해 BIEN멤버들에게 총회 때 다음 개최국을 한국에 투표해달라고 홍보하는 일이었다. 첫날 학회가 끝난 후 와인 파티에서 각국의 기본소득 활동가를 만나 팸플릿을 전달하고 학회 중간 쉬는 시간에도 만났다.

학회 종료 후, BIEN 총회가 시작되었고 거의 마지막 순서에 다음 개최국 후보

인 한국, 핀란드, 네덜란드가 차례로 다음 개최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그 후 회의 실 강단에 십여 명이 줄을 서 차례로 질문을 쏟아냈다. 학회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장소는 어디일지 등. 영어책을 몇 권이나 번역한 훌륭한 3인방이지만, 제2외국어이고 정식 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들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나에게서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함 그 자체였다. 이들의 긴장감은 홀에 앉아 있는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고 발표자 효상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결국 두 나라가 한국에 양보하고 2016년 한국 개최를 확정지었다. 두 나라가 모두 한국의 준비를 보고 감명을 받아 한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세 나라 중 오로지 ‘한국만이 팸플릿과 한글 파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며, 언어적 장벽 속에서 선택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지 발언이 있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대세는 이미 한국인 듯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삼인방의 만남과 함께 처음 알게 되었다. 기본소득의 내용보다는 이들의 활동을 더 많이 지지하게 되었다.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지였다. 좋아하는 활동가들이 지지해서 지지했다.

그때 알았다.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섹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마, 무시한 이들의 지적능력은 보이지 않고, 제2외국어 영어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국제 활동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들의 용감함이 너무 짜릿하게 다가왔다. 나의 무기력은 부끄러워 내 맘 깊이깊이 숨어 버린 것도 몰랐다. 일생을 영어 선생으로 산 나로서는, 나보다 똑똑한 젊은 학생들이 빛나는 밝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광경을 보는 것처럼 보람을 느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학위를 받고 미국에 남지 않고, 그들이 연결되었을지 모르는 NGO단체에 취업했고, 라오스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 단체와, 삼인방에게 새 희망을 얻었으리라. 잠시 무기력이라는 친구를 멀리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껏 나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렇게 2016년에 한국에서 BIEN이 개최되었고, 난 라오스에서 마지막 연차를 모두 써 한국 학회에 참석하였다.

86년도 창립 이래 40여 개국의 참가국이 참여한 Seoul BIEN 학회는 성공적이었다. 처음이라 완벽하게 하고 싶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준비한 학회는 개최 주체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을지 모르나, 내 눈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난무하는 즐거운 소풍 같은 학회였다. 청년들이 기본소득 쿠폰을 발표자 전원에게 나눠주어 차를 한잔씩 마실 수 있는 카페를 학회장에 만들었다. 또한, 학회 전날에는 록 콘서트라는 청년 활동가들의 문화예술 전야

제도 있었고, 학회 둘째날 밤에는 해외 활동가들의 DJ로 국제 댄스파티가 열려 흥을 돋구기도 했다.

또한 라오스에 서둘러 귀국하는 바람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DMZ도 외국 활동가들이 갈 수 있도록 주최 측에서 자원봉사를 해주었다. 이 모두는 핀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인도 학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의 왕성한 활동력이 돋보이는 학회였다.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시간을 보낸 순간이었다. 한국에 기본소득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했다.

그 후 7년, 2023년 8월 포르투갈, 핀란드, 인도, 아이슬란드, 호주를 지나 한국에서 국제대회가 2번째로 열렸다. 22년에는 연 120만원 기본소득 실행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도 나오고, 0.7퍼센트로 떨어졌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이 기본소득 첫 현실로 이루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소리가 나온다.

“대만도 한국처럼 기본소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회 발표자인, 대만 청년 활동가, Tyler가 용혜인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한국도 아직 현실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을 듣고, 갑자기 귀가 번득 띄었다. 뭔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지만, 그는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이뤄놓은 것이 자랑스러웠는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제는 기본소득 활동가들이 자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 1986년 시작된 BIEN은 European Network이었으나, 2006년 Earth Network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2010년 한국 가입을 시작으로, 2016년 아시아 한국에서 3인방과 함께 처음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전에서 종우 선배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10년 후에 기본소득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꺼라 생각하지 못했다. 나 또한 그랬다. 이제 되었다. 이제 기본소득은 내가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전 국민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기본소득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활동 할 때가 아니라, 가족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로 깊숙이 공유되어야 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청년들의 저항이 없던 이유는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건 내 켄데’ 저자 이선배는 이야기한다. 정부 단체장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의한 정책이라야 뿌리내릴 수 있다고. 이제 나

를 믿고 지지해 주는 이들과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세상에 대해 사심 없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이번 학회에서 한바탕 놀다 왔다. 예술가에게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도 하고, 청년 예술가들과 미숙하지만 버스킹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나의 주변의 예술가들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들은 어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영상으로 담아서 발표했다. 예술가들은 과거의 나처럼 기본소득을 잘 모르지만 지지하고, 나의 활동을 응원해 주었다. 학술 학회이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나를 포함한 대중이 즐거우면 되는 것이다. 단체를 조직하고, 많은 활동을 해야한다는 조바심은 무기력과 친구하라고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것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다른 세상을 향한 것일지라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이 또한 현실일 수도 있으니.

-23년 10월 일본 오카야마 성에서-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비교 연구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민입니다.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비교 연구: 빈곤 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요소들의 효과성·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2023년 8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저는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 제도가 빈곤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NIT 제도에서 빈곤 완화라고 하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소득의 범위(소득인정액 개념 도입), 보장 대상(최소보장소득과 NIT 세율의 수준), 보장방법(가구 단위 지급과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고려) 등을 달리할 경우 그러한 변화들이 실제 빈곤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시나리오 및 모형별 빈곤율, 빈곤의 심도, 빈곤의 심각도, 지니계수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현행 조세 및 복지 제도(이하 현행 제도)와 여섯 가지 시나리오에서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지수를 비교 측정함으로써,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한 현행 제도 및 다섯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및 효율성에 관한 여섯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의 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균등화 가구 처분가능소득과 균등화 가구 시장소득의 빈곤지수 비교를 수행하였습니다. 여섯 시나리오는 하나의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와 다섯 가지의 NIT 정책 변화 시나리오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40% 정률소득세-기본소득 모형(이하 정률소득세 모형)을 반영하는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NIT를 지급하는 저소득구간에서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소득 정의를 변화시키는 경우를 반영하는 NIT의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이하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NIT 급여의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을 ‘평균소득의 40%’에서 ‘중위소득의 40%’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를 반영하는 NIT의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이

하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 네 번째 시나리오는 NIT 세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를 반영하는 NIT 세율 조정 시나리오(이하 세율 조정 시나리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NIT 급여를 가구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서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를 반영하는 NIT의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이하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상기 4가지 정책 변화를 모두 적용한 상태를 반영하는 NIT의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이하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와 다섯 가지의 NIT 정책 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과세와 급여의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직접효과모형과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과세와 급여의 적용으로 인한 노동공급 반응도 감안한 행태반응모형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직접효과모형은 기본소득 혹은 NIT 지급을 위한 과세액과 기본소득 혹은 NIT 지급액이 일치하는 재정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분석되었으며, 행태반응모형은 이산선택모형 접근법과 가법적 확률효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습니다.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 및 다섯 시나리오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간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 비교와 가설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현행 제도 및 다섯 시나리오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 현행보다 가구별 순이전소득이 증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률소득세 모형이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를 이용하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소득과의 소득 차에 비례하여 순수혜액을 지급하거나 순기여액을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노동공급 반응이 빈곤과 불평등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상기 언급한 기제들의 영향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 및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선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성이 낮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가 귀속임대료와 순자산의 고려로 인하여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서 가구별 순이전소득 액수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설 설정 시 예측과는 달리,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 효율성이 낮은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접효과모형의 측면에서 볼 때,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도 NIT 순수혜액을 지급하게 되는 위험보다 빈곤한 가구에 NIT 순수혜액을 더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커플가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공급 감소는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한 소득 정의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성과 효율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셋째,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였습니다. 반면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성이 낮게 나온 것은 최소보장소득의 감소로 인해 순수혜가구가 받게 되는 NIT 급여액이 줄어드는 데다, NIT 세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소보장소득 감소와 연동된 손익분기소득의 감소로 NIT 순수혜가구에서 NIT 순기여가구로 바뀐 가구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싱글가구 여성의

intensive margin 감소와 커플가구의 extensive margin 감소는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한 최소보장소득 수준 변화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성과 효율성을 줄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세율 조정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율 조정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NIT 세율만 놓고 보았을 때는 NIT 세율이 50%일 때가 40%일 때보다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차액을 더 높은 비율로 보전해주는 것이 사실이나, 최소보장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NIT 세율의 증가는 손익분기점 소득 자체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시장소득이 0인 개인의 경우 양 시나리오에서 받는 NIT 급여가 일치하지만, 0 초과 세율 조정 시나리오 하에서의 손익분기점 소득 미만 소득의 경우에는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서 받는 NIT 급여가 세율 조정 시나리오에서 받는 그것보다 더 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율 조정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해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직접효과모형의 측면에서 볼 때, 빈곤 개선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이 일정한 상황에서 NIT 세율의 상향 조정이 빈곤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빈곤갭 감소와 빈곤층 내 불평등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노동공급 반응 또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에 비한 세율 조정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과성과 효율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섯째,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가구 단위 지급 시나리오의 빈곤 개선 효율성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직접효과모형에서는 성립하였으나, 행태반응모형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에서 빈곤 개선의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노동공급 반응 고려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직접효과모형의 측면에서 고찰하자면, 빈곤지수의 측정 단위와 NIT 급여의 지급 단위를 가구로 일치시키는 것이 빈곤 개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구 단위 지급으로 인하여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속한 저소득 혹은 무소득 개인에게 NIT 급여가 직접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빈곤하지 않은 가구에 NIT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중위소득 및 빈곤선 자체를 끌어올리는 힘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빈곤지수를 더 많이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태반응모형의 측면에서 보자면, NIT 수급가구의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가구의 노동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빈곤율, 빈곤갭, 빈곤층 내 불평등도 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여섯째, 직접효과모형과 행태반응모형 모두에서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가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보다 빈곤 개선의 효과성은 더 우수하나, 빈곤 개선의 효율성은 열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종합 정책 변화 시나리오가 NIT 지급대상을 가급적 빈곤층으로 표적화하기 위하여 동시에 도입했던 요소들, 곧 NIT 지급구간에서의 소득을 시장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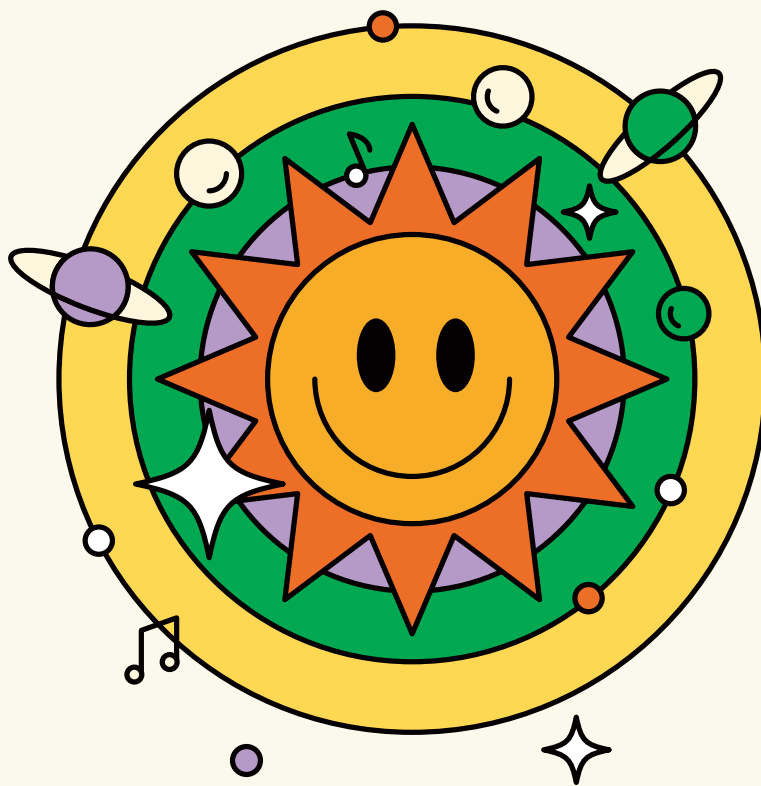
최소보장소득의 수준을 낮추는 것, NIT 세율을 높이는 것, 개인에서 가구로 지급 단위를 변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표적화에는 성공적이거나, 그로 인해 순이전소득을 줄임으로써 빈곤 개선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림을 보여줍니다. 노동공급 반응이 불평등 개선의 효율성에는 분명한 영향을 미쳤지만, 빈곤 개선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과 NIT의 제도적 및 정책목표적 차이에 명시적으로 주목하면서, 특히 빈곤 완화를 지향하는 NIT의 제도적 요소들을 모수적, 비모수적 차원에서 식별하고 이들이 실제로 빈곤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네 가지 요소 각각과 그것들의 종합이 실제 빈곤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은 기본소득과 NIT 제도의 비교 맥락뿐만 아니라 NIT 제도의 구체적인 내적 설계에서도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과 NIT의 빈곤 개선 효과를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노동공급효과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공동효용-공동예산 모형에 입각한 가구효용극대화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미시 모의실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동공급효과 분석의 결과를 빈곤 개선 효과 분석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시켰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거나 노동공급효과와 빈곤 개선 효과를 별개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데 그쳤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소득과 NIT가 순수하게 제도 설계적인 측면만이 고려되면 경제학적으로 동등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목표 면에서의 두 제도의 차이가 명시적으로 고려되면 경제학적 동등성은 필연적으로 깨지게 된다는 점을 동시에 주목함으로써, 기본소득과 NIT의 제도 특성과 정책효과 비교에 참고할 만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도 이론적인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최소보장소득, 소득구간별 세율, 가구별 순이전소득 총합만으로는 각 시나리오별 노동공급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재분배의 역설과 관련한 이론적 함의 역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혹은 NIT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필요한 후속 연구과제를 제언 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저의 향후 연구계획은 Luke Martinelli 박사가 제기한 “기본소득의 트라이얼레마”에 관한 대처 방안을 우리나라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연구, 통제집단 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한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기본소득의 건강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BASIC INCOME IN REALITY

현실 속의 기본소득



9 772733812007
ISSN 2733-8126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

기
본
수
입
2023
가을+겨울
#017